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2. 02

VOL. 663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내일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CONTENTS



08



30



32

국회보

2022. 02 / VOL. 663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2년 2월 3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익성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김수옥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종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주)이팝 02)514-7567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새 중앙·지방정부 들어서는 전환의 기회 준비해야”

박병석 국회의장, 스리랑카 공식 방문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으로 국민 헌신에 보답하는 국회 될 것”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박물관 공사 근로자 격려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19 특집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 방안

공공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_나백주

의료 인력 양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_조희숙

팬데믹 시대, 공공병원 확충해야 _우석균

‘특수성’과 ‘전문성’ 고려한 과학적 대응체계 갖춰야 _송기민

공공의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_신항진

30 상임위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늘 초심을 되새기며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_김병기 정보위원회 간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빈틈없이 확인·점검할 것”

_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34 길에서 길을 찾다 _장경태 의원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동대문

38 의원의 좌우명 _이성만 의원

새옹지마(塞翁之馬)

40 칭찬합니다 _이영 의원

국회로 온 디지털 전문가

4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오기형 의원

“정치의 본질은 이념보다 국민 삶이 먼저라는 것”

4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가족 정책’, ‘간호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34



38



40



42

**표지 이야기**

'건강하세요'라는 인사가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더 든든한 국회가 되겠습니다.

47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편서거권 연령 하향법',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의결

54 위원회는 지금

국회, '철책 월북' 사건 현안보고 및 미디어특위 자문위 구성

56 법률 시대를 읽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_이상현

58 국회 주재관 리포트

프랑스 하원의 이해충돌 심사 사례 _박기현

62 법 시행 그 후

대한민국 산업에 새 활력 불어넣는 '탄소소재법'

64 만화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66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초고령 사회, 로봇이 돌보는 시대가 온다

68 국회 뉴스**73 국회의 꽃꽂이 나무 이야기**

플라타너스 나무

74 기고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_이현정
2022년 달라지는 국회 출입 시스템 _노형래

78 국회 사람들

"현장감·전문성으로 미래연구원 성장에 보탬 될 것"

80 이 달의 서평

느끼고 아는 존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_이대영

82 고전의 향연

새길과 옛길을 눈앞에 두고 _신승운

84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카간'이자 중국 '황제'로 800년 넘게 중앙아시아 호령한 거란 제국 _이광태

87 생활 속 우리말글

조사 '-의'를 사용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_김풍기

88 속기록으로 본 이달의 의정사

'청와대 습격 사건'을 둘러싼 대정부 질의 _장미경

90 우리 건축 이야기

한국 원류 사상 '풍류(風流)'가 낳은 '통(通)의 미학' _임석재

94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원대봉 _유인근

98 바이러스의 역사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_도현신

100 국회 미술관

위대한 자연에 대한 헌사 _김준기

103 정치 관련 주요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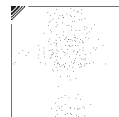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3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2년도 시무식'에서 시무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새 중앙·지방정부 들어서는 전환의 기회 준비해야”

2022년 국회 시무식 열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3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2년도 시무식’에서 “올해는 중앙과 지방 모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전환의 기회”라며 “새로운 정책들이 잇달아 나올 것이니 국회가 미리 준비해 민생을 차질 없이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국회국민동의 청원 성립요건 완화(10만→5만 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5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국회 가속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1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특히 박 의장은 “올해는 ‘국회 세종시대’ 청사진이 그려지는 뜻깊은 해다.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고, 올해 그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며 “국회 세종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의 첫 길목에 우리 국회 구성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선공후사, 선국후당의 정신으로 임해야”

박 의장은 다가오는 3·9대통령 선거와 6·1지방선거를 언급하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 선거 앞에 한 치의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불편부당하게, 그리고 공직자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자. 제21대국회가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신을 부활시킨 국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국회, 국민의 내일을 앞서 생각한 국회라는 평가를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2022년도 시무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공무원 노조지부장, 공무원 근로자 대표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선국후당(先國後黨). 흔들림 없이 국익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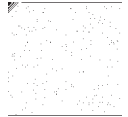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20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스리랑카 공식 방문

이들간의 '원 포인트' 자원 경제 외교 나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19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정부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019년 11월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로는 첫 방문이다. 박 의장은 짧은 기

간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 마힌다 야파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잇달아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개정,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개발프로젝트 참여 등을 타진했다.



양국 간 광물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합의

박 의장은 1월 20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 의장은 “양국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 협력 가능성이 무척 높다”며 “우리 기업도 스리랑카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의 교역을 늘리기 위해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리랑카에 진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면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양국 간 자원 협력과 관련해 “스리랑카는 흑연을 비롯해 광물자원이 풍부하니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를 희망한다”고 했고, 박 의장은 “전환기적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스리랑카가 신뢰에 기반한 우호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스리랑카 의장과 행정·상업수도 분리운영 관련 의견 교환

박 의장은 1월 21일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행정수도 스리 자야와르데네푸라 코테에 있는 스리랑카 국회를 찾아 스리랑카의 행정수도·상업수도 분리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스리랑카 국회는 본회의 도중 회의를 멈추고 박 의장과 대표단을 환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21일 스리랑카 국회를 찾아 마힌다 아파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박 의장은 “한국도 세종시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지을 계획이다. 스리랑카가 왜 국회와 주요 부처를 코테로 옮겼나”라고 물었고, 아베와르다나 의장은 “첫째 교통난 해소, 둘째는 공간확보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콜롬보에는 더 이상 새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콜롬보의 건물들은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보존이 필요한 건물이어서 허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박 의장은 현지 동포 및 기업 지·상사 대표들을 만나 애로와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박 의장은 “바닷물 닿는 곳에 파도가 있듯이, 우리 국민이 활약하고 있지 않은 곳이 없다”며 “코로나19로 최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포들에게 위로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스리랑카에는 600여 명의 재외동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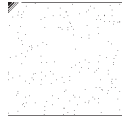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강민석 의장특보, 조구래 특임대사 등이 함께했다. 🍵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으로 국민 헌신에 보답하는 국회 될 것”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 영상 기자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6일 열린 신년 영상 기자간담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를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6일 신년 영상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코로나19 관련 민생 입법을 가장 먼저 다뤄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며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선거 전후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통합이 절실하다”며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 개헌이다. 대선 직후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다툼과 세계 공급망의 재편은 세계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Q. 1년 반을 되돌아보시면서 가장 내세울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또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국회를 이끌어가고 싶으신지요?

A.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기틀을 정착시켜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한 것도 대단히 뜻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21대 국회 출범 첫해에 원 구성 협상 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여야가 합의문까지 작성했지만 어느 한 당

이 내부에서 관철시키지 못해 최종 실행에 옮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새로운 원 구성을 합의했고 2년 연속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세 번의 추경안, 20년 동안 숙제로 남아있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최근 언론중재법에 관한 여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해 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정치지형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러한 변화와 관계없이, 대선과 관계없이,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민생 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기억에 남는 협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제21대 국회의 협치 점수를 몇 점 정도로 매기실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 또는 국회 차원의 대선후보 토론회를 주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A. 우선 지난 1년 반의 협치에 점수를 매기는 것은 국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국회에 비해 첨예한 쟁점들을 모두 합의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여야 공개 원내대표 회담이 42회 열렸고, 비공개 원내대표회담을 포함하면 100회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 내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진의원들이나 정치원로들과 끊임없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틀을 닦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구성 문제였죠. 새로 원

내대표들이 뽑힌 이후 두 번 의장 주재로 협상을 촉구했고 양 원내대표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 3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합의한 원구성은 의장인 제가 배수진을 치고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게 결론이 났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를 지지하는 의원 수가 압도적이었지만 이것은 국회와 국가에 지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합의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했고 그것을 이끌어낼 때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해서는 저는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 두 분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원 0선 후보들입니다. 국민들 속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상대방이나 언론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현상을 진단하고,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가 여야 간의 토론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양 후보가 더 많은 토론에 합의하면 몰라도 저는 여러 언론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론의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상황에 따라 그런 문제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어떤 건지, 여야 대선 후보 상관없이 집권할 경우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A.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국민통합과 대전환시대의 미래비전,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중장

기비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소명,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 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지난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설 추진상황과 남은 절차, 이전 대상과 규모 등 향후 계획을 알고 싶고요.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 입법화 노력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A. 국회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원래 국가균형발전을 설계할 때 세종이 핵이 되고 세종에서부터 두 시간 거리에 부챗살처럼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이 핵을 중심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계획은 2027년이 완공 목표고요, 즉 국회로 치면 다음 제22대국회 말이면 세종국회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세종국회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효율성에 관한 연구용역은 이미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 개념에 대한 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다섯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세종시에 내려간 정부부처가 모두 12개고 국회로 치면 11개 상임위원회인데, 최소한 이 11개 상임위원회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비교적 넓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국회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지난해 9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지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주장도 꽤 있습니다. 설계는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하 되, 공사는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속에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위 검토는 끝난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그것이 구체화되거나 공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 국회의 완성과 2차 공공기관의 이전,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국가가 균형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5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단기적인 실적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국가과제는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한계를 의회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제도를 최근 제안한 바 있고, 면책특권을 제한

하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의장에 취임하고 3개의 의장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가중장기비전위원회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석학 70여 명이 참여한 위원회입니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5년 단임정부가 소홀하기 쉽거나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임기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반드시 힘 있게 추진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아젠다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간은 2037년, 즉 5년 대통령 임기 3대까지 계속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입니다.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 내용이 탄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 지역에서의 3선 연임금지는 원론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해볼만한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책특권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으로부터 법적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일부 과도한 부분은 재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양심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작년에 코로나19로 정상외교, 중앙 정부 외교가 쉽지 않았는데 의장님은 많은 해외 활동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의회외교 성과, 특히 경제 부분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역대 모든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공통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길은 외교라는 것입니다.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는 씨줄과 날줄과 같아서 서로 엮여야 합니다. 특히 정부 외교는 실질적 외교가 될 수 있지만 5년 단임의 한계, 장관재직기간 2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진영을 넘어 초당적 외교를 강조해왔고, 실사구시에 입각한 원칙 있는 탄력적 외교를 주장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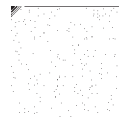
긴급현안과 관련된 성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소수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친분이 있는 의장들에게 공급 가능한 업체의 명단을 하루 만에 받아서 관계당국에 전달해 요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프가니스

탄에서 한국에 협력했던 분들의 구조, 탈출과정에 있어서 해당 관련국 대통령과 말씀을 나눈 뒤에 적극적 협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등 한국기업인들이 자주 왕래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 즉 격리 단축·면제 등에 대해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 협력에 관해서는 이집트에서 원전 수주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서 작년에 제가 제기했던 10억불이 넘는 두 가지 큰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최근에 와서 해주셨습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각 대륙별로 백신생산허브 및 인력양성허브기지를 지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월드컵보다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는데, WHO 사무총장을 만나 인력양성 허브기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관해서는 지난달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회의포럼(APPF) 회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막판에 영상회의로 전환했지만 한국의 종전 선언과 평화에 관해 이견이 있는 나라가 좀 있었는데, 그 이견을 잘 조정해서 단 한 명의 이의 없이 22개국 211명의 의원들이 한국의 남북국회회담, 종전선언, 평화회담에 지지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남북국회회담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종전선언 관련해서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A. 종전 선언에 대해 국내에서 의견이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입구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70년 가까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종전선언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대화로 가는 길목을 열자는 뜻을 강하게 가지고



1월 6일 열린 신년 영상 기자회견담회 모습

있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의 국회의장들 또는 정상들, 어떤 나라는 북한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대사관을 열고 있지요. 그분들의 중재도 있었고 해서 북측도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뜻을 잘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가 정부와 별도로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남북 정부 간 화해·대화와 함께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척 아쉬웠던 것은 북한이 외국인들의 북한 입국과 북한 국내 사람들의 외국 출국을 다 금지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국제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남북국회회담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1년여 동안 회의를 했고요. 남북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어떤 방법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것인지 특히 남북국회회담이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돼왔고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북국회회담사에 대해 별도로 연구 보고서를 냈으므로 앞으로 누가 의장으로 오더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Q. 국회윤리심사자문위 회의에서 의원 3명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 의견이 특위로 넘어가도 징계안 의결에는 아무런 시한이 없어 벌써부터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도덕성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도덕성 요구 수준의 눈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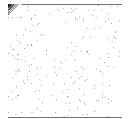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영상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으로 참석한 기자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이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국회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을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윤리특위가 실질적 활동을 해 달하는 의장서한을 두 차례 보낸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 분의 사건은 자문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국회윤리특위에 제시한 상태죠.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를 거치고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은 윤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과 결정,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조직을 보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 국회의원 0선 출신 후보들과 국회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쌓아가야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0선 출신의 대선후보는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지

요. 국회를 포함한 기성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전 세계가 처한 코로나19 상황, 한국적 상황이 합리적인 지도력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국회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앞으로의 나라 발전에 참신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는가 하는 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죠. 이재명 후보는 후보가 되신 후 의장실에서 두 번 뵈고, 윤석열 후보도 예비후보가 되신 후 한 번, 후보가 되신 후에 한번 뵈고 심상정 후보도 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 같이 의회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의회를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주셨습니다. 개헌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지도자의 선의, 대통령이 ‘내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선의에 기대해서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확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써 제약해줘야만 합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의회정치가 제대로 됐던 것은 여소야대의 4당 정치 때였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에 관해서 한 분은 침묵을 하셨고 한 분은 부분, 또는 점진적 개헌에 찬성하셨고, 한 분은 전폭적인 찬성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들 중에 개헌에 관해서 공·사석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고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는 국민통합과 시대대전환에 필요한 국가미래비전을 강조했는데 두 분이 양당의 후보가 되신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기구를 만들어주신 것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하반기 국회의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개헌 로드맵은?

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지도자들이나 정당에 대해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6%, 헌법학자의 77%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의원의 93.3%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의회 지도자들과 개헌에 대해 얘기해보면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의원내각론자입니다’ 하면서도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합시다’ 하면 ‘대선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개헌문제는 집권 초기에 논의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새로 정권을 잡아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해야 되는데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또 다른 블랙홀이 생겨 정책노선이 흐려질 것이라는 이유로 개헌논의를 안하고, 집권말기에는 곧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무려 35년을 보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이, 헌법학자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행

에 옮기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대선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란 국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선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는 쉽게 합의가 되고 어떤 분야는 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의되는 분야만 지방선거가 있을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권력구조 같은 민감한 문제는 더 논의해서 2년 후 총선에서 동시투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야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것입니다.

Q. 미디어특위 기간 연장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의장님께서 중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언론중재법의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언론으로부터 당한 피해에 관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많은 논란과 파동 속에서도 특위를 만들었고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올해 특위를 연장한 것도 의장의 강한 의지가 표현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말국회를 열지 말고 1월 국회에서 재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월에 연장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산이 되고 재구성 형태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절대반대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했다, 적어도 합의되는 부분은 통과를 시켜라’.

지난해 밀도 있는 논의 끝에 언론 피해에 대한 정정보도, 문제가 심각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포털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습니다. 언론자유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언론 피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Q.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의장님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정당가입연령 하향은 획기적 조치지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는 우리 세대를 보면서 ‘저렇게 철들지 않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끌어갈까’ 걱정하셨지만 우리 세대는 부모세대보다 나라를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해 그런 걱정이 있지만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SNS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와 더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이 달라지지 않는 세상, 이런 것이 제가 늘 정치를 하면서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여건을 조성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해왔고 그리고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룰 수 있

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Q. 우리 사회 갈등과 양극화가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해졌고 대선 이후 국민 통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의장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대책을 구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제안한 정치분과 이외에 경제·사회분과에서 제안한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A. 선진국에 속하는 30여 개 OECD 국가 중에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갈등으로 지불되는 비용이 총 GDP의 23%라는 결과도 봤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한 반도의 평화도, 경제발전도,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시한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승자독식의 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양극화가 심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심하니까 사회대타협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려면 소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반영되고 의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표 얻은 만큼의 의석구도의 분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제도가 개혁돼야 하고요. 그리고 의회구조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의회 자체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단체장들과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양원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표 얻은 만큼의 의석구조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개헌,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리 김현아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가운데)이 1월 11일 국회박물관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격려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 국회박물관 공사 근로자 격려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은 1월 11일 국회박물관 공사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이 총장은 코로나19와 강추위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회박물관 전면 개편 공사를 위해 수고하는 근로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100여 명에게 보온 장갑·보온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오는 4월 전면개편된 국회박물관 재개관 예정

국회사무처는 국회박물관(구 헌정기념관) 전시공간의 체계적 개편을 위해 헌정기념관 건립(1998년) 이후 최초로 전면 개편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민

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추어 오는 4월 11일에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 혹한기 강추위 등 열악한 공사 환경에도 국회박물관 전면 개편 공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공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격려 방문 행사에는 전상수 입법차장, 한웅헌 문화소통기획관, 이복우 공보기획관 등이 함께 참석했다. 🍷



1월 14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에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가운데)과 국회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희 센터장, 최병권 기초실장, 조용복 사무차장, 이춘석 총장, 전상수 입법차장, 권영진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황규상 감사관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월 14일 국회 소통관 3층에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국회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권 교육과 예방 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 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됐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됐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

해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 '국회사무처직제' 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 1월 14일 현판식을 하게 됐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김경희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특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 방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의료체계는 한계에 봉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야별로 살펴보았습니다.<편집자주>



공공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의료 인력 양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조희숙 강원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팬데믹 시대, 공공병원 확충해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특수성’과 ‘전문성’ 고려한 과학적 대응체계 갖춰야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공공의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공공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의료를 크게 개인에 대한 치료라는 측면과 인구집단에 대한 보건의료제도와 예방체계 측면으로 구분할 때 공공의료는 후자, 즉 인구집단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예방체계를 이야기한다고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정부 소유 공공병원 및 보건소를 엮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 후 이를 중심으로 민간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견인하는 것을 공공의료체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달체계가 튼튼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보건의료시장 외의 공공의료 서비스 즉, 재난대응 의료 및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 의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고 동시에 보건의료시장 내 공공의료서비스, 저비용 적정진료를 수행해 민간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상업화를 견제할 수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지역별, 계층별 건강불평등 심화

한국은 공공병원 병상 비중이 전체 병상대비 10.2%, OECD 평균 70.8%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1천 명당 공공병원 병상수는 1.3개로 역시 OECD 평균 3.0개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민간에 위탁한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공통점은 부지와 건물 그리고 주요 병원 장비에 대한 투자가 정부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면 모든 운영비가 정부에 의해 조달되는 것이고 민간에 위탁되면 운영비는 일체 정부가 관여하지 않게 된다. 법인형태 공공병원은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가 관여하는데 정부의 특성에 따라 지원정도에 차이가 크다. 사실 공공병원이 가지는 의료공공성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사회는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도 낮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도 소규모로 운영돼 취약계층 진료나 결핵 등 특수질환 진료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국 민간병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민간병원은 상호 경쟁적인 의료서비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스 수행으로 의료기관간의 협력 연계 기능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높은 항생제 처방률,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등 상업적 의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와 함께 병상수 규모도 작은 중소규모의 병원 형태가 난립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해 공공의료체계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사회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은 지역별, 계층별 건강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의료비 증가, 재난의료에 대한 대응 부족, 예방의료의 결여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증가속도(2013~2018년)는 7.3%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 비율도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편(2019년 7.5%)으로 OECD 평균 5.8%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별 심뇌혈관질환 및 암질환의 접근성 격차도 매우 크다. 단적인 예를 들면 각 지역 거주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접근 기준시간인 30분내 접근불가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경남은 50.7%, 전남은 43.9%, 경북은 41.5%, 강원 35.6%로 매우 높지만 서울·대전·광주 등은 거의 0%로 격차가 큰 실정이다.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충원 위한 정부 투자 대폭 늘려야

한국의 공공병원은 병상수 비중도 낮으며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중환자진료까지 가능한 충분한 규모의 병원도 매우 적은 실정이어서 혁신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기후변화 등 재난상황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의 의료대

응을 공공병원 및 보건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각 중진료권마다 빠짐없이 최소 한 개씩의 공공병원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 또 각 공공병원에 '지역의료과'를 설치하고 응급진료 및 중환자 진료 체계를 지역여건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특히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약 30개 중진료권은 공공병원 신축 혹은 기존 민간병원의 매입 형태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서 수행하는 예방중심의 지역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의사, 간호, 약사 등 의료인력이 병상당 충분히 충원돼 지역의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 우선 매년 1조 원 가량의 재원을 충당해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매칭으로 공공병원 확충 사업 및 공적운영 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재원은 담배소비세의 개별소비세 가운데 약 50%를 확보하면 매년 1조 원 충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매칭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행 50%에서 20%까지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재정여건이 안좋을수록 공공병원 신규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을 재정측면에서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현대화 계획을 위의 기금과 연계해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세워 이 기금 예산이 지자체 예산과 매칭돼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

의료 인력 양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의료서비스를 예측해 어느 한 곳에 미리 만들어 저장해두었다가 이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운반해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의료인력에 대한 고민은 필요없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동과 저장이 불가능한데다 고도의 전문화된 인력에 의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 우리나라 의사가 많은가 적은가를 단순히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를 놓고 비교하는 다툼은 소모적이다. 의사가 많은 데도 있고 턱없이 부족한 데도 있기 때문이다. 빌딩 하나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의원 간판, 같은 건물에 내과 의원이 층을 달리하며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의원 하나를 가려고 해도 차로 30km를 달려야 하는 강원도 농촌지역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골든타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양성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취약지 의료인력의 분포, 질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필요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는 최소 10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숙련도, 축적된 경력을 추가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급하다고 단기 속성 과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취약지 상황은 한시가 급하다. 지금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의사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숙련도 높은 의료진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늘리더라도 중환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의사들마저 떠나갈까 우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 의사의 국내 진출을 대안으로 이야기해 보는 경우도 있으나



조희숙
강원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일단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공유하는 문화도 전혀 달라 의사 간, 의사-환자의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 근무를 하며 지역 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임상교수란 권역책임의료기관(서울대병원 및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필수보건의료 영역의 진료,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이 정년보장트랙으로 채용하는 교수를 말한다.

본원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 활동을 하고 지방의료원에서는 파견 근무를 하며 중진료권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 공공임상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임상교수가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은퇴 의사의 취약지 근무 지원에 대한 정책도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2020년 전국의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59%가 은퇴 후 지속적 근로 의향을 보고했는데, 주된 이유는 자기만족 및 자아실현이 50%로 높았다. 특히 은퇴 후 의료취약지 근무 의향에 대해 52.3%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난은 비단 의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간호인력 충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간호대 신설이나 입학정원 확대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도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유휴 인력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의 임금 표준화, 탄력근무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제도 도입, 간호대학생 대상 공중보건장학제도의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싶다.

중장기적인 방안, 양-분포-질을 고려한 패키지 정책 필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이는 우수인력 분포와 질적 수준을 담보한 양적 접근을 포함해 입학-교육-수련-배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지원 등 연속성을 지닌 균형 잡힌 정책을 필요로 한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에서 근무할 학생을 입학, 교육 시키는 방안,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를 수행할 학생에 대한 공중보건 장학제도 제공, 지방 병원에 대한 전공의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지방 의료원 공동 수련을 제안한다. 졸업생 규모가 많지 않아 양, 분포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수 있으나 선도적인 공공의료의 모범과 표준진료 및 정책의료 구현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근무하고 싶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일이다. 취약지 일차 의료 및 병원급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정책, 그리고 일하고 싶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드는 지원이 필요하다. 🍵

팬데믹 시대, 공공병원 확충해야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네차례 겪었다. 그리고 매우 불행하게도 병상부족 사태도 똑같이 4번 겪었다. 1차 대구경북 사태를 되돌아켜 보면 당시 대구·경북에는 4만 병상이 있었지만 약 1천~1천200 병상만 활용됐고 나머지 3만9천병상은 활용되지 않았다. 코로나 환자들은 경남 부산의 공공병원 나아가 광주, 충남 충북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의 공공병원까지 가서 입원을 해야 했다.

대구경북 대유행 시기는 1차 유행이었으므로 아직 초기여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2차 파고, 즉 2020년 여름 수도권 대유행 시기에도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020~2021년 겨울로 이어진 3차 유행 시기에도 병상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났다. 집에서 병상을 대기하는 환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병상을 구하지 못해 집단 사망이 발생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전국민 백신 접종이 80%가 된 시점, 즉 지난해 11월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병상대기 환자가 1천 명이 넘었다. 심지어는 2021년 12월 초에는 일반 중환자실까지 모자라는 의료붕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공공병원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 것이 문제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이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OECD 평균의 2.6배나 된다. 이런 수치를 들 필요도 없다. 대도시에 즐비한 대형병원은 다 무엇인가. 한국에 병상이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유행 초기 즉 2020년 초기에나 겪은 의료붕괴 상황을 우리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파고가 닥칠 때마다 겪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는 코로나19 의료대응을 거의 전적으로 공공병원, 그것도 지방의료원에 의존해 대응한 정부의 의료대응 문제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 정도이고 병상 수로는 10% 정도다. 100년에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한 번 온 전세계적 팬데믹을 10%의 공공병원만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 비중이 25~30%로 적은 미국이나 일본은 당연히 공사립병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병원을 동원했다. 오로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대응을 했다. 작년 7월까지 10%의 공공병원이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했고 12월까지 따지면 코로나19 환자의 70% 정도를 진료했다. 병상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사립병원 동원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는 문제다. 정부가 병상 동원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들 중 대형사립병원들 즉, 이른바 ‘빅 5’인 아산, 삼성,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한 대형사립병원들이 병상을 내놓기 어려워했고 정부도 이들 병원의 병상을 어떻게 동원하는지 방법을 몰랐다. 정부는 작년 겨울 대형사립병원들에게 전체 병상의 3%에 해당하는 중환자실(1.5%)과 일반병실(1.5%)을 코로나 병실로 내달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도 아산병원에서는 40개 중환자실, 삼성병원에서는 30개 중환자실이 동원된다. 여기까지는 병원들이 병상을 동원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그래도 병상이 모자라자 정부가 1% 병실을 더 코로나19 환자에 배정하라고 하자 사실상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 행정명령을 내린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병상의 50%가 채 동원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료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에 꼭 입원해야 할 전문진료환자의 비중은 평균 38.5%다. 이중 중환자나 희귀환자의 비중은 ‘빅 5’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높지만 그래도 50%를 넘지 않는

다. 병실의 10% 이상을 비우는 것은 병원진료체계 전체를 바꾸어 비응급, 비중증 환자를 미루면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이 병실을 10% 이상 비우겠다고 나서기 까지 했으니 다른 병원들이 못할 것이 없다.

100년 만의 팬데믹,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서조차 사립병원이 공공적 목적으로 동원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 재정의 80%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책임지는 나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정은 20% 미만이다. 게다가 모든 사립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사실상 국가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팬데믹이라는 국가 위기에 다른 모든 나라와 달리 사립병원을 동원할 수 없다? 이는 의료체제로만 보면 나라가 아니다.

공립병원이 너무 적어 사립병원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아예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도 사립병원에게 공적 책임을 강제하고 동원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의료체계는 정말 위험하다. 코로나 19는 마지막 팬데믹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은 상시적으로 닥칠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공립병원을 최소한 30%로 그 비중을 높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의 미래는 위험하다.

고속도로 7km 건설할 돈만 있으면 500병상의 공공병원 하나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한 지역에 공공병원, 공공요양병원이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의료가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최소한 자기 병원의 이익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병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공병원 확충은 그 최소한을 갖추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기반이다. 🍲

‘특수성’과 ‘전문성’ 고려한 과학적 대응체계 갖춰야



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

최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구분할 만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 놓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조직으로는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청와대 방역기획관 등이 있다.

중대본은 재난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본부장이 되고, 해외 발생 재난의 경우 외교부 장관이, 방사능 재난의 경우 중앙방사능재난대책본부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이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될 수 있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우선이라 할 것이고, 재난 대응관련 근간이 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할 것이다. 방역체계 등 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재난안전법 상 몇 가지 우려스러움이 있다.

우선, 중대본, 방대본, 중수본, 방역기획관 등 방역대책 지위 조직과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태다. 4개 중앙정부 조직에 전국 지자체까지 하루가 다르게 대책을 각각 발표하면, 그렇지 않아도 수시로 변동되고 지역마다 상이한데, 방역대책의 주체까지 다르면, 어디를 믿고 따라야 할지 국민으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역조직의 기능중복과 업무의 혼선 등의 문제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지적됐다. 하지만, 당시 지적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 2021년 6월 중대본과 방대본의 서로 엇갈린 대책 발표를 하는 문제가 또 다시 반복됐다. 이를 두고, 정치방역에 과학방역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재난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일본의 경우, 우리의 재난안전법과 유사한 ‘재해대책기본법’이 있

다. 이 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재난대응은 우리와 유사하지만, 통합재난관리방식이 아닌 재난을 유형별로 관리하는 분산관리방식을 택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재난에 대해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중앙정부와 현 및 시정촌 등 각기 권한과 책임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감염병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두 번째는 감염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감염병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재난관리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해 구분하고 있고, 특수한 재난의 성격을 인정해 해외발생 재난과 방사능 재난의 경우 그 재난에 부합하는 예외적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감염병의 경우,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와 같은 사회재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세균, 바이러스 등 자연적으로 발생해 사회문화적으로 전파되는 경우 이를 사회재난이라 구분하는 것은,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전파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류한 판단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오히려 감염병 재난의 바이러스 발병(변이) 자체는 자연에 기인한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보다는 별도의 감염병재난 또는 복합재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가 사회재난으로 간주되는 것은 감염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된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염병재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과학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재난안전법 상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의 및 분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난 유형에 따른 기능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고통 속에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의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증후군에 대한 방역대책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좀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대응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방역 관련 기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전해철 2차장(행정안전부장관), 각 지자체장 등

사회 각 부문 인력 자원 동원, 출입국 관리, 외교적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등 종합적 지원 논의 및 시행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역학조사, 격리 및 격리 해제, 진단검사, 입국 시 검역, 환자 치료 등 방역 전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권덕철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방대본 보조 역할

공공의료 관련 국회 입법 동향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감염병 대응과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데 공공병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 대비 부족하므로 공공병원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의료 개념은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기본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같은 법에서 정의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서울대 포함),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열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①의료인 가운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의료법인, ③‘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이 개설할 수 있다. 공공의료는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주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은 총 230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가 부족한 편으로, 2018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수 및 병상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비중은 각각 53.6%, 71.6%이나 우리나라는 각각 5.7%, 10.0%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영국, 캐나다뿐 아니라 미국(각각 23.0%, 21.5%)이나 일본(각각 18.3%,



신항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27.2%)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다만, 이 통계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256개소(2020년 기준), 보건지소(1천337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77개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1천901개소)가 빠져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월 시행

공공의료는 현행 법률체계에 비추어보건대 공적 주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에 제정된 같은 법이 2012년에 전부개정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 규정이 종전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현재와 같이 확대됐는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최근 논의에서 사용되는 공공의료의 개념은 구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공공의료 개념이 반영된 법적 용어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편성을 지향하는 모든 의료 활동을 공공의료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현행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분만·소아청소년), 공공전문진료

센터(어린이·노인·호흡기·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고,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운영비·장비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제21대국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했고, 올해 2월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을 매입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제21대국회 전반기에는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체계에 포함해 그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구현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행정상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이 따르도록 하는 ‘의료법’ 등의 제반 규정이 이러한 공공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법률체계 아래에서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제외하고 공적 주체나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길이 차단되어 있다. 영리 추구의 동기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영리 추구의 기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늘 초심을 되새기며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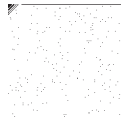
김병기 정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갑

Q.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간사위원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제21대국회 들어 지난 약 1년 반 동안 정보위는 제20대국회에서 못다 했던 국가정보원 개혁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함께 힘써주신 모든 정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0대국회부터 약 6여 년간 정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와 잘

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능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왔습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야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늘 초심을 되새기며 더 좋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정보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최근 정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A. 정보위는 국가안보를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정원이 국가의 안위, 국민의 복리만 생각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과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본회의 통과가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짧게 잡아도 1987년 이후 30년간 거론됐지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와야,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각오로, 논란이 많아도 한 발은 떼야 한다는 비장함 속에 발의했던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정치관여금지’, ‘공소시효 연장’,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 추적 금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통 끝에 결국 제21대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상당했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Q. 정보위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후 위기, 먹거리 문제, 경제 안보 침해 등의 신(新)안보 정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안보 문제를 정보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 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2000년, 영국에선 2010년부터 팬데믹 예방이 1순위 정보수집 목표입니다. 한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파동’ 문제, 최근 요소수 사태처럼 계속적으로 신(新) 경제안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부처에서도 사전 인지 또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이 현저하게 정보역량이 저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은 점입니다. 국정원 밖에선 새로운 업무(신안보 분야)가 국정원에 주어지면 ‘딴짓 할 것’이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민주적 통제입니다. 신안보 분야의 직무를 광범위하게 주면 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려면 정보위 승인은 필수입니다.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개혁은 각 기관과 상원의 철저한 신뢰 속에 성공했습니다. 기관은 모든 것을 보고하고, 의회는 철저히 보안을 지켰습니다.

국정원이 신안보 정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수집한 정보를 정보위에 보고하는 등 통제방안을 마련해 부작용을 막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정원 내부에 정보감찰관을 두어 통제하도록 하고, 청와대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관리·감독하는 체제가 최종 목표입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님께 칭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하태경 간사님과는 국방위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가장 좋은 카운터 파트너이시며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입니다. 협상에 있어 어떤 애기를 해도 경청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배려심과 함께 매사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정보위에서나 국방위에서나 몇 단계 높은 질의를 하시는 것을 보며 평소에도 많은 준비와 공부를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하태경 간사님과 함께 정보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빈틈없이 확인·점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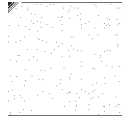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갑

Q.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 간사위원으로서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A. 정보위는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 해경, 사이버작전 사령부, 안보지원사, 국방정보본부 등 군의 주요 정보조직을 국회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취급하는 사안은 국가 안보와 대북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다른 국회 상임위와는 다르게 전체 회의가 전부 비공개입니다. 그리고 정보위 회의록의 경우도

정보위원에게만 열람 가능하도록 해 국가기밀정보가 누출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위에서 관할하는 정부 기관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모든 국내외 정보를 총괄·조정하고, 테러와 마약조직 퇴치, 해킹 대응 등 국가 안보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국가의 안보를 위한 조직입니다. 국민과 국가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정원이 본인들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감시도 필요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합니다. 합리적 균형감각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위 간사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정보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 해주십시오.

A. 정보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주요 안보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관계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수립 이후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무기 같은 전략자산의 개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 수립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해킹과 개인들에 대한 해킹, 특히 방산업체들에 대한 북한 등 적대국가 및 조직들의 해킹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 받으며 국민 안전과 국익이 제대로 지켜지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과거 고질병이었던 국내정치개입 근절을 강하게 요구했고 2020년 국정원법 개정 논의 중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관철시켰습니다. 여야 합의 통과가 아닌 여당 단독 통과로 그 노력의 빛이 바랬지만 국정원 60년 흑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국정원의 악습인 국내정치 개입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정치개입을 근절해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정보위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정보위는 평상시에는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포함

한 적대국가의 정보와 동향 및 우리나라와 국민을 향한 테러, 사이버공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는 지 점검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단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긴급한 사안은 정보위 소집을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도 수립합니다.

정보위의 향후 과제로는 첫째, 국정원을 정권이 아닌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세우기 위해 국내정치 개입을 시도조차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여전히 계속되는 북한 등 국가와 해외조직들의 적대적 목적의 해킹을 보다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셋째, 포괄적인 국가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넷째, 미·중관계 등 변화하는 국제관계와 국제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보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 등 국가 및 국민경제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경제 및 자원 수급 동향과 같은 경제정보 수집을 통해 국가경제안보도 지켜야 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장님께 칭찬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A. 김병기 간사님은 국정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여야 합의로 정보위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정보위는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닌 국익을 위한 통합의 상임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병기 간사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여야 합의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는 대원칙이 잘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동대문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를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대한(大寒)을 하루 앞둔 1월의 어느 날, 평평 쏟아지는 함박눈을 맞으며 서울 동대문구를 찾았다. 좌(左)로는 청계천이, 우(右)로는 종량천이 흐르는 이곳은 청량리역, 답십리역, 장한평역 등이 위치해 있고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다.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살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고(故) 장준하 의원을 배출한 이곳은 청년 정치인 장경태 의원의 지역구, 동대문구를 지역이다.

장경태 의원은 구정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로타리 시장을 찾았다. 시장 입구에는 주머니 사정 어려운 이들도 자주 찾는 ‘500원 부추부침개’로 유명한 추억의 가게가 자리하고 있었다. 부침개를 부치던 시장 상인은 장 의원을 반갑게 맞으며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장 의원은 “100원이라도 값을 올려야 하지 않느냐고 해도 저렇게 500원만 받으신다”고 귀띔했다. 장 의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시장을 지나는 동안 “얼마 전 TV토론 잘 봤다”거나 “몸조심 하라” 같은 덕담이 이어졌다.

배봉산 둘레길과 전농동 부군당

장 의원은 이어 동대문구 주민들의 명소인 배봉산에 들렀다. 배봉산 입구에는 동대문구 구립도서관인 ‘배봉산 숲속 도서관’이 위치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1만 5천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창 너머로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 왔다. 고요한 풍경을 뒤로 하고 몇몇 시민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도서관을 나와 배봉산 둘레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대문구 배봉산 정상에서

마침 다시 흩뿌리기 시작한 눈발이 점점 더 거세졌다.

동대문구 전농동과 휘경동에 걸쳐 있는 배봉산 둘레길은 2018년 4.5km 코스로 조성됐다. 둘레길은 출발과 도착 지점이 같은 순환형 등산로로, 동네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산책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가족 등도 무장애숲길(테크로드)을 따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또, 서울시립대, 배봉초등학교, 삼육서울병원, 휘경여고 등 여러 코스를 통해 둘레길로 진입할 수 있다.

배봉산 일대에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의 터 등이 남아 있다. 항상 부친을 그리워

했던 정조가 못다한 효를 한다며 매일 궁궐에서 아버지의 묘소가 위치한 산을 향해 배례하면서 산 이름이 ‘배봉산(拜峰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다. 눈을 맞으며 30분 정도 걸어 배봉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는 주민들의 쉼터인 배봉산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눈이 와서 그런지 내려오는 길은 오르는 길보다 험난했다. 이어 장 의원이 향한 곳은 전농동 부군당. 세종 20년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이곳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이 위치해 있다. 부군당은 조선조 개국공신이었던 조반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이곳



전농 로타리 시장에서

에서 지역 주민들은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며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빌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부군당 무신도는 서울특별시 민속문화재 제35호로 지정돼 있다.

중랑천 둔치는 체육공간과 휴식공간 등이 조성돼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장안동 일대의 중랑천 벚꽃길에는 벚꽃나무 500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벚꽃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이곳 중랑천 둔치에서 열렸다. 중랑천 장평교 주변에 자리한 중랑천 벚꽃길 북카페도 이곳 명소다. 봄 벚꽃 개화 기간, 벚꽃 아래서 중랑천변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월의 중랑천에는 벚꽃은 없었지만 대신 흰 눈이 내려 운치를 더했다.

비정규직의 삶을 아는 정치인

83년생인 장경태 의원은 2006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기까지 당 생활만 15년 넘게 했다. 장 의원은 “기업에서 평사원이 임원

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평당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전국청년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하루하루 낙엽을 줌은 심정으로 절실하게 정치를 해왔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정당 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정규직 삶을 포기해야 했고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다. 그렇기에 그는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삶을 아는 정치인이다.

“학습지 교사를 할 때였어요. 과목당 3만5천 원을 받는데, 그 중 제 몫은 약 40%가 됩니다. 수업 사이에 시간이 비면, 천 원짜리 커피를 사들고 냉난방이 되는 마트를 돌아다녔죠. 밤 10시까지 이 집 저 집 돌아 보면 저녁은 굶어요. 제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주장한 것도 그때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장 의원은 모교인 서울시립대와 20대 청춘이 녹아 있는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다. 장 의원은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출마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영입 인재들과 달리 일반 공모로 경선을 치르고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그렇게 어렵게 국회에 들어온 뒤 그는 하루 24시간을 쫓개 살고 있다. 그가 활동



동대문구 전농동 부군당



중앙천 둔치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

하고 있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만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4곳이나 된다.

계층 간 불평등 심화되는 사회에 기회의 사다리 놓고 싶어

장경태 의원은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고 싶다”며 ‘청년 사다리법’을 발의하고 있다.

“청년정치 사다리법’, ‘청소년 사다리법’, ‘청년주거 사다리법’, ‘청년금융 사다리법’, ‘청년기업 사다리법’ 등을 꾸준히 발의해 왔습니다. 청년정치 사다리법은 지난해 말 통과됐죠. 지방의원 후보자도 국회의원처럼 후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만 18세 피선거권 통과

등 청소년의 권리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사각지대를 찾아 입법을 하려고 합니다.”

차 안에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며 국회로 향하는 장 의원에게 ‘제2의 장경태’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한마디를 부탁해봤다.

“젊은 세대는 현재의 일부지만 미래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현재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저희는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젊은이들도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 또한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좌절하지 마세요. 완전히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새옹지마(塞翁之馬)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용기가
돼준 가르침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

인천시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고 국회에 입성한 이성만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새옹지마(塞翁之馬)다. 이 의원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일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을 수없이 겪었다”며 “덕분에 시련이 닥쳐도 ‘이것은 더 큰 성공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게 됐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혹시 안 좋은 일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 경계하면서 몸을 낮추는 버릇이 생겼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성만 의원은 군대를 다녀온 뒤 뒤늦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서기관 승진을 앞둔 즈음 그는 안정된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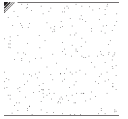
“7년 정도의 공무원 생활을 접고 벤처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카드 대란이 발생해 제가 투자했던 카드사가 망하면서 제 사업도 같이 망했죠. 그때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후 이성만 의원은 대학에서 도시행정 강의를 했던 경력 덕분에 한 학원으로부터 부동산학을 강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년 정도의 강사 생활 끝에 그는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사업을 하면서 큰 위기를 겪어보니 비빌 언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비빌 언덕이 되는 못할지라도 희망을 주고, 길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지요.”

이성만 의원은 “학원 강사 시절 집사람은 저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시의원 선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400~500명 앞에서 강의를 했던 덕분에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부동산학을 가르치다 보니 지역 문제도 훤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의



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생이 새옹지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원과 시의장 시절 이성만 의원은 민원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제일 열심히 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재개발이 큰 이슈였는데, 재개발 사업은 조합 측과 비대위의 싸움으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중재를 많이 했습니다. 양쪽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만들어 설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수익이 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재도전에 성공한 이성만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른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새옹지마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했다.

“당시 제가 공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로 15% 감점을 받은 상태였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 다른 후보를 단수공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보는 10% 가산점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경선을 치러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15% 감점을 받은 것이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때문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인생이 새옹지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원칙 지키되 개별 사안에는 융통성 발휘하는 정치 모색할 것”

국회 입성 후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논의에 참

여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비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인정해준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났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밖에도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거의 모든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도 보람 있는 일로 꼽았다.

“우리 의원실에 파견 나온 인천대 학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강기 버튼 등에 부착된 항균 필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처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에 점자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등이 항균 필름처럼 점자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법안 발의 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감사인사를 전하시더군요. 그래서 더욱 보람이 컸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국가가 행정체계를 만들고 재정을 관리하는 등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와서 보니 원칙을 지키는 것에만 골몰해 일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론과 경험축적으로 예외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직자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미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국회로 온 디지털 전문가

이영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보 2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이영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은 “같은 여성 창업자 출신 국회의원이자 선배 여성 창업자로서 존경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영 의원은 “제가 본 홍 의원은 현장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분”이라며 “여의도 밖 국민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의정 활동을 하는 모습이 저와 같아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다”고 말했다.

카이스트 박사, 정보보안 벤처기업 CEO 출신이자 한 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지낸 이영 의원은 제21대국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기업 경영과 함께 여

성벤처기업인 특허청장상, 여성무역인력유공자 국무총리표창, 제15회 대한민국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을 받아 정치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로 불린다. 잘 나가던 여성 기업가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가 궁금했다.

이 의원은 “기업을 운영해보니 세금 문제, 정부 지원, 제재 관련 법률까지 알아야할 것들도 많고, 규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매일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져갈 무렵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공적인 DNA를 발견했다”며 운을 띄웠다.

“나보다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에게 더 힘이 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됐죠. 대학에서 수학, 대학원에서 암호학을 공부하고 정보보안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여의도에 가면 잘 쓰일 것 같았죠. 꼭



정치로 표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회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면 산업계 전반에 도움이 되리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중소기업 등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또 효율적인 전자 업무 시스템이 국회에도 정착돼야 한다면서 제21대국회 최초로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하고 국회의 아날로그식 업무방식에 깜짝 놀랐어요. 한 예로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려면 본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좌관은 법안을 출력한 종이를 들고 다른 의원실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뒤, 도장을 받기 위해 또 다시 의원실을 일일이 다녀야 합니다. 정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자 발의 문화가 상당히 정착됐고, 50% 정도의 법안이 전자발의 형식으로 제출되는 것을 보며 힘을 더 많이 얻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론’, ‘AI’ 등장시켜 화제

이영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후보로 도전했다. 전당대회를 3주 앞두고 출마선언을 해 주변에서 모두 무모한 도전이라 말렸지만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기 위해서는 디지털과 데이터 중심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뛰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드론’과 ‘AI이영’을 등장시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비록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못했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이 디지털과 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해주셨고, 당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ICT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진흥법률안’,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 경제침체, 대량 실업 위기 등 비관적인 내용들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때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가 되겠다고 결심했지요.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 열리고 있는 만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을 칭찬합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과는 같은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이자 동갑내기라 친해졌는데 회의 때마다 정말 본받고 싶은 정도로 자료 조사와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는 성실한 분입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 규모를 최초로 전수 조사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지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은주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정치의 본질은 이념보다 국민 삶이 먼저라는 것”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오기형 의원은 전남 화순군 남면에서 삼베집 큰아들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시절 월셋방을 전전하며 네 차례나 학교를 옮겨야 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광주로 이사 와 쪽 살다 중학교 2학년 무렵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된다.



광주도청에서 약 100여m 떨어진 곳에 살았던 그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다. 그에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다. 트럭에 탄 사람들의 비장한 표정, 무섭게 울렸던 총소리. 오 의원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다. 그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독일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전모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5년 서울대 해양학과에 입학했지만 그만두고 이듬해 서울대 법대에 다시 입학했다. 오 의원은 “그런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다. 군부 독재에 맞서기 위해 학생운동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구속됐다. 오 의원은 문민정부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1996년 사법시험 2차에 합격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아, 3차 면접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다. 결국 그는 1997년 사법시험을 다시 치러 1차, 2차, 3차 시험에 한꺼번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오 의원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일했고, 졸업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그는 남북 경제협력에 관심을 갖고 관련 분야 연구를 계속해 왔으며 ‘개성공업지구 법령 및 제도해설’,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동료변호사들과 함께 만들었다.

오 의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이 된 중국의 개혁 개방 체제와 법제를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2005년 하반기 북경어언대에서 중국어 연수를 받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여름 이후 약 5년간 법무법인 태평양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를 지내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 자문과 한중합작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국회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불린다.

2016년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제의를 받았다. “당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보내 달라”고 했던 오 의원은 도봉구를 지역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당직을 맡아 활동했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도전한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규제의 패러다임 바꿀 ‘징벌배상법안’, ‘집단소송법안’에 큰 관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 의원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은 2020년 제1·2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징벌배상법안’과 ‘집단소송법안’이다. 그는 두 법안을 설명하면서 뜻밖에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징벌적배상과 집단소송을 통해 사후적 책임을 강하게 물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봤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30년 전 진보가 지금도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지금도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것이 진보고 개혁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이념과 이론보다 국민 삶이 먼저라는 것, 그게 정치의 본질적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가족 정책’, ‘간호법 제정’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가족 구성원 정책간담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족 구성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기존 혈연 중심 가족 정책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가족구성권연구소가 수행한 정의당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배복주 정의당 젠더인권선대위 선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 순서로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가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구성권 담론 진행 현황과 현행 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발제했고,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족구성권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구술생애 작가이자 아랫마을 야학 교사인 최현숙 작가가 노년 1인 가구, 빈곤 노인들의 입장을 담은 사례를 발표했다.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이벤트 산업 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벤트 산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벤트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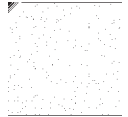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철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가 이벤트 산업 현황 및 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정철상 한국이벤트협회 중앙회장이 좌장으로, 김한석 한국이벤트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정진 한국이벤트 산업협동조합 고문, 조정환 한국이벤트 산업연구원 원장, 최시군 한국이벤트협회 부회장, 차정현 한국 축제컨텐츠협회 회장이 지정 토론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이벤트업체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벤트 관계자들의 의견과 함께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스마트수산업어촌포럼 창립 및 기념 세미나

수산업과 어촌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수산업어촌포럼’이 1월 5일 창립식을 열고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마트수산업어촌포럼은 이날 창립총회에서 김성호 한



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박신철 수협중앙회 조합 감사위원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이영기 구글 클라우드 앱시트 한국파트너 대표이사, 임정수 농어업 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임정수 공동대표를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세미나는 7명의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삼석·어기구·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하영제·김정재 의원)이 공동개최했으며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이 ‘뉴노멀시대 스마트어촌 전환의 골든타임’을, 이중용 구글 클라우드 앱시트 한국파트너 부사장이 ‘클라우드 앱시트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서정숙(국민의힘)·최연숙(국민의당) 의원은 1월 7일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사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서순림 경북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광윤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이 발제했다.

발제 후에는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장, 백병성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오지은 법률사무

소 선 변호사,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식품용 용기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허용하는 식약처 고시가 개정된 이후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현재 시행 중인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와 현황을 점검하고, 고품질 자원재활용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제1발제에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국내 페트병 Bottle To Bottle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2발제로는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체계 개선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와 더불어 B2B 재활용방법의 국내·외 동향, 분리배출표시 적용방법 개선,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 식품용 투명 페트 분리배출 환경 개선, 우리나라 페트병 재생원료 고품질화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 심층 토론회가 진행됐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의와 노동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좌장에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자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준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사관계법제팀장, 양승엽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조사관이 나서 기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펼쳤다.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박용진·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정의당) 의원은 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금융산업 주 4일 근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황기돈 나은내일연구원 원장은 비대면 거래 확대와 AI 신기술 도입과 같은 은행의 패러

다임 변화와 함께 주4일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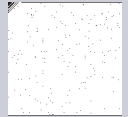
이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주4일제 실험사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모델’ 발제 후 2부에서는 김형선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주4일제에 대한 외국의 실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산업에서의 주4일제 도입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했다.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립하고 문화권 정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성주·김종민·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은 1월 18일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도 및 가야문화권에 비해 소외된 후백제 역사문화권 시·군간 상생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학술 및 정책적 검토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사의 의미’, 정상기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고고·미술사적 자료로 보는 후백제 문화권의 범주’, 진정환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후백제 문화권 정립과 추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뤄졌고, 이와 함께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



국회 본회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등 의결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활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또 국회는 1월 11일 2022년 첫 본회의(제392회<임시회> 제2차)를 열고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법’,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국민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영장사본 교부법’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고려해, 자동차에 부착된 활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활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었다. 동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으나 해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을 하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만 18세인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해,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



의자 등의 당사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현행법은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할 뿐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집행 당사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영장에 적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도모했다. 다만, 개정법은 집행 당사자가 현장에 없는 등의 이유로 영장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집행 당사자가 영장 사본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8월 입국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에 대해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사회적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원의 근거가 훈령에 있어 관련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개정됐다.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특별기여자 등”)에 대하여는 난민법상 처우 규정을 준용하고, 초기 생활지원, 취업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기여자등의 안정적인 우리나라 정착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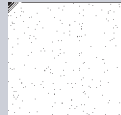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노동이사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동이사’의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임기는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이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올 하반기에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하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현행 제도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민간 R&D 유공 표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법을 통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하여 발굴·육성하는 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행하는 연구기관 평가와 관련해 현행법상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대한 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던 것을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출 기한까지 명시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의 보다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상이등급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 대상을 여자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최근의 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중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성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인정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해,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적용되던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인 정경옥씨가 암투병으로 별세하며 남겨진 고등학생 외아들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동의로 강입된 경우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현행 직제 또는 정원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돼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입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본인 동의로 강입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현행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경우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것을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서해수호 장병들과 같이 전투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들에게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

현행법은 국방정보보호를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해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1월 ‘인천 흥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대응이 문제가 되자, 현장경찰이 소송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현행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형평상 경찰관에 대한 면책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속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찰관의 현장대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뮤지컬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한시적이고 산발적이라는 지적과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정비가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로 독립적으로 명시하고,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했다. 법의 목적,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공연장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했다. 또 공연시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는 주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를 포함하고, 재해예방조치와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해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뮤지컬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발전이 기대되고, 공연장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6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각 역사문화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관련 유적·유물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어 해당 분포지역을 포함하거나 역사문화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도 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 지역으로 범위를 정했다.

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 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금융지원·세제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인·허가 등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해외에 매각·이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제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국가경제의 안보를 실현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9년 6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 정보 연계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경찰관서의 장 등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우선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추후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파기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살자의 형사사법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 연계를 통한 자살고위험군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실효적인 자살예방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양식장 내 동일 용수 사용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 등에 대해 위생상 조치 근거가 필요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조사를 위해 출입 가능한 장소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양식장 수산물에 대한 출하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기 조치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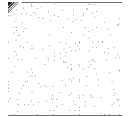
이번 개정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6월 광주에서 해체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해 17인의 사상자(사망 9인, 부상 8인)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사전에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또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체계획서 제출 시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중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해체심의 제도’를 신설하고, 해체공사 관련 법령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 및 벌칙·과태료 신설·강화를 통해 해체공사의 안전성 제고 및 제도 이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365일 일하는 국회 전국 어디서나 **같은번호**

IPTV

65

olleh tv B tv



전국
채널번호

skyLife 케이블 방송

165

※ 일부지역 케이블TV는 번호상이

국회방송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본방사수를 못해도!!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국회방송'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생방송 시청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국회방송 앱



● 소셜미디어 채널



국회방송  NATV

www.natv.go.kr

국회, ‘철책 월북’ 사건 현안보고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위 자문위 구성

국방위 현안질의... ‘철책월북’ 질타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부실한 경계 태세와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육군 22사단에서 총 네차례 귀순·월북이 일어났다는 점을 놓고 구조적 점검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규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월북 사건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최전선 부대의 군 기강이 이렇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모든 장병이 해태한 것 아니냐”며 “언제부터 남북 간 왕래가 이렇게 자유로웠나. 22사단에 가면 이 산가족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도 “노크 귀순, 월책 귀순, 해엄 귀순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왜 22사단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언제 월북, 귀순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경계하는 부대다. 경계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중 위원(국민의힘)은 “(월북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몇 사람이 회의하고 판단해서 ‘아, 이거는 월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인데 누가 이런 결론을 냈느냐.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냐”며 “지금 우리 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이번 월북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킨 GP(감시초소) 인근에서 발생한 것을 거론하며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기호 위원(국민의힘)은 국방부에 “앞으로 이 GP에 병력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9·19 군사합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우리 경제 태세를 무너뜨리고 망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기동민 의원은 “야당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로 경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는데 2012년 10월 노크 귀순은 GP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냐”며 “이번 사건의 원인이 남북군사합의에 있는 것처럼 인과 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건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가 체계적인 법안 논의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토론과 연구·자문 등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향후 언론·미디어 관계법 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미디어특위는 1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자문위원회는 2개 분과에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미디어 생태계 문제를 각각 논의하기로 했다. 분과별로 9명씩 구성되는 자문위원 인선은 미디어 단체와 여야 교섭단체 정당이 동일한 추천권(단체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을 갖도록 했다.

이날 여야는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우선 자문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의결해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던 특위 활동 기간이 오는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상현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목소리를 담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의결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16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공정하면서도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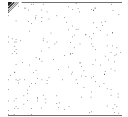
제20대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으나, 이번 제21대국회에서는 공정회 등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법의 주요내용

제정법은 총 6개장, 4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법은 공무원 등에 의한 예술 활동 방해 행위, 국가기관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예술인 차별행위 등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국가기관 등의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정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 예술인 조합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



는 권리 등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법적 권리로 신설했다.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한 반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국가기관·예술지원기관 등의 불공정행위까지 금지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의 범위가 보다 두터워졌으며,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입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희롱 관련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예술인은 예술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등은 예술인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했다.

끝으로, 제정법에서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예술인이 예술인권리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문체부에 신고하면, 문체부 소속 예술인보호관이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 행정처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해당 행위를 한 예술지원기관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기관 등은 해당 행위를 한 예술사업자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법률안 심사 관련 주요 논의사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제정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예술인’의 정의에서 당초 제정안과 같이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예비 예술인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예비 예술인’도 예술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을 감안할 때 예술인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신고접수 및 피해지원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기관에서 수행하지 않고 문체부 소속 공무원인 예술인 보호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있었으나, 정부에서 책임지고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예술계 현장의 선호를 담아 최종적으로 예술인보호관 체제로 의견을 모았다.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국가 원리를 지향하면서 예술의 자유 및 예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예술인의 헌법상 권리가 보다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제정법에서 예술인의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권을 새로이 명시한 만큼, 향후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집행 과정에서도 예술계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입법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프랑스 하원의 이해충돌 심사 사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5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안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부칙 특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5월 15일까지 등록 사항을 심사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인 국회 운영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넓은 의정활동 범위를 고려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초기에 어떤 분야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우리 국회의 이해충돌 심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이미 2011년부터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 등록 및 심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하원의 다양한 심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의원의 청문회 참석과 이해충돌

대통령이 공직에 지명한 인사와 과거 내각에서 같이 근무해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의원이 해당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하는지 여부에 관해, 하원 윤리관¹⁾은 의원과 지명자가 현재 어떠한 공적·사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참석은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인사청문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이 구두로 그런 사정을 보고해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박기현

국회 프랑스 주재관

1) 이해충돌 발생 여부를 심사하고 그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의원들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장 직속 자문관



한편 딸의 배우자가 행정책임자로 있는 기관에 대한 의원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한 사례에서, 윤리관은 직접적인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 없이 해당 의원에게 그런 사실을 심사 과정에서 구두로 보고하거나, 청문회 참석은 하되 토론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청문회에 불참할 것을 권고해 간접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결국 그 의원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의원의 법안 심사 참여와 이해충돌

1. 배우자의 경제활동

의원 배우자가 의원이 심사 중인 법률안 조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관리직 채용에 응시해 여론의 비난을 초래한 사례에서, 윤리관은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고, 채용 예정 직무의 성격상 대 의회 로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히 배우자의 과거 직업 이력을 고려할 때 배우자 채용과 해당 법안 통과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원의 배우자가 그 기업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 사정을 고려할 때 의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리관은 이 사안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다만 의회 법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이 그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을 먼저 공개하고 법안 심사에 참가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앞으로 그 기업이 관련된 법안 심사 참여시 항상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

므로 사전에 회피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배우자가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 중인 의원이 그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윤리관은 해당 의원이 법안 심사에 참여하더라도 관련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의 토론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2. 의원의 과거 직업 활동

과거 식음료 소매점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직접 식음료 소매점을 경영하기도 했던 의원이 식음료 소매점에 관한 법안 심사에 참가한 사례 및 가족들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의 대표를 역임한 의원이 동 업체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문배급 관련 법안 심사에 참가한 사례에 대해, 윤리관은 의원이 과거 직업 활동으로 얻게 된 지식·경험을 법안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나 다만 법안 통과로 얻게 될 사익과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사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의 토론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 의원이 재정적으로 관여된 기업 활동

은퇴 연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근무했고 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의원이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한 사례에 대해, 윤리관은 의원에게 제출된 법률안 중 의원과 관계된 보험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부 조항의 심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의원은 회피 제도를 활용해 해당 조항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한편, 윤리관은 의회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충분히 보장되어



크리스토퍼 팔레즈 신임 하원 윤리관을 임명한 프랑스 하원 본회의(2020.12.9)

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이해충돌을 고발하는 언론의 기사만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보게 되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이 제약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의원이 사익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이해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SNS·출판물 등을 통한 기업 홍보와 이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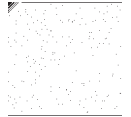
의원이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하원 참관 일정이 포함된 파리 여행 상품을 판매하다 여론의 비판을 받은 사례에서, 의원은 해당 여행 상품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판매하던 상품으로 자신은 공천 이후 여행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임기 개시 이후 실제로 판매된 상품도 없어 여행사가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다며 이해충돌을 부인했다. 하지만 윤리관은 여행 상품의 실제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안은 사익을 위해 의원이라는 직위와 의회 시설을 이용한 이해충돌 사례로 판단해 해당 상품 판매를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의원은 이를 수용했다.

또, 어떤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의정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집무 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신문을 소개하고 구독을 권유한 사례에서, 윤리관은 이를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로 보아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의원은 해당 부분을 삭제해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했다.

한편, 자신이 과거 소유했던 부동산 사무소를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광고물을 게시한 또 다른 의원의 사례에서도 윤리관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으므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그 의원은 윤리관의 권고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원 의사규칙에 따르면 이해충돌 발생 시 윤리관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의원에게는 의장단 결정으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의 사례에서는 의원들이 모두 윤리관의 권고를 수용해 윤리관이 의장에게 징계를 건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의장은 세 의원 모



두, 의원 직위를 개별 기업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의사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처분의 한 종류인 경고(rappel à l'ordre)를 부과했다.

한편, 또 다른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본사를 둔 유명 식음료 기업의 제품이 하원 식당에 납품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하원 식당에서 해당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안에 대해, 윤리관은 그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입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전술한 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원 직위를 개별 기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의원은 프랑스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윤리관의 보고 이후 의장단도 이 사례에서는 어떤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배경으로 단지 원구성에 의한 의장단 변경 외 다른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큰 비판이 제기되었고, 위 사례는 자율규제가 갖는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의회 윤리를 강화해온 기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다.

토론회 개최·참가와 이해충돌

윤리관은 의원들의 토론회 개최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으나 다원성 보장이 중요하므로 토론회 참가자들의 재정적 지원 정도에 비례해 발언권을 차등 부

여하는 등의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의원들이 토론회 참가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사례에 관해 의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과거의 직업 이력이나 의회 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토론회에서 수당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의회 내 특정 직위, 가령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자격으로 참가하는 토론회에서 수당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원이 외부 단체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가할 때 초청장 등에 의회 로고가 사용될 경우 국민들이 동 행사의 성격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의회 로고가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해충돌 등록심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원

위에서 살펴본 프랑스 의회의 사례를 볼 때 이해충돌은 의원의 고유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용의 확산에 따라 의원의 부주의 혹은 고의로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았다. 일단 이해충돌 발생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의원 개인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자체의 공정성도 의심받게 되므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이해충돌 등록심사 제도를 충실하게 활용해 우리 국회의 윤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대한민국 산업에 새 활력 불어넣는 ‘탄소소재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시행 2020.11.20.)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2016년 5월 제정됐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구가 없었다.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020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11월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의 내용과 성과, 보완점 등을 알아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연구소,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돼 있으나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전담해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기획부터 시장창출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국제협력 및 기술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등의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모든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소소재’란 탄소 원료(원유·가스·석탄)를 이용해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뜻한다.

탄소소재는 금속, 플라스틱 등 기존의 소재들을 보완·대체하면서 레저용품, 항공부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주요 소재·부품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한다. 글로벌 환경오염 규제 강화, 탄소중립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탄소소재 시장은 2019년 52조 원에서 2030년 176조 원으로 연평균 11.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탄소소재 기술력, 미국·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지난해 11월 ‘탄소소재법’ 시행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보고회’가 진흥원에서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대규모 민간투자자와 연계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대표 소재인 탄소섬유를 세계에서 세번째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것과, 한국의 탄소소재 기술력이 미국·일본·독일에 이은 세계 4위이자 선진국대비 80%의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행사에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첨단소재인 탄소소재에서 자립화가 진전되고 국내 공급망이 탄탄해져 가는 것을 보면 소재강국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된다”며 “탄소소재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핵심소재인 만큼, 원천기술 확보와 자립화를 위한 사업 예산 확보, 예타사업(약 5천억 원) 추진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2월 정부 차원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소재 융복합 전문 기업 1천600개 육성, 5만 명의 고용창출, 연매출 50조 원, 수출 10조 원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탄소소재 융복합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탄소소재 관련 수요-공급기업간 연대·협력 협의체인 ‘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탄소중립 등 11개 분야 100여 개의 기업들과 함께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해 6개월 만인 지난 11월 탄소섬유 생산라인 증설 투자, 탄소섬유 재활용 공장건립 등 4천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및 공급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0년 7월 전주, 군산, 완주 등 일대가 탄소융복합산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소부장뿌리기술타전'에서 참관인들이 탄소소재로 만든 자동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실증, 탄소복합재 적용 소형선박 실증, 고압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실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융합형 혁신 생태계 플랫폼’ 구축해야

향후 과제에 대해 진흥원 측은 “대한민국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육성, 그리고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융합형 혁신생태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산·학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의 전주기에 걸친 통합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변화하는 수요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아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한 산업 육성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글 고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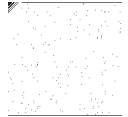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2021-12-27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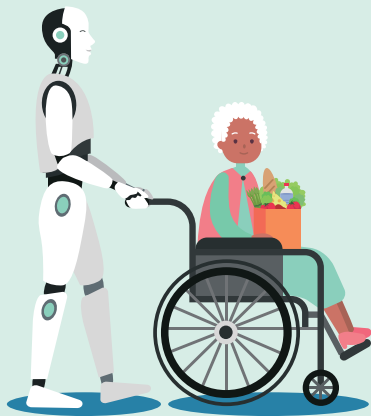
2021-12-31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초고령 사회, 로봇이 돌보는 시대가 온다



헬스케어 로봇 산업 전문 기업 ㈜로보케어

2월호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추천한 ㈜로보케어를 소개합니다. ㈜로보케어는 헬스케어 로봇 산업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지 기능 증진을 위한 로봇 기술 개발 등으로 지난해 정보통신 기술향상 부문 국무총리상, 로봇신문 주관 3년 연속 '올해의 대한민국 로봇기업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몇 달 전 TV에서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 등장한 장면이 나왔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실수가 없고 일정한 결과물을 낸다는 설명이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일은 이미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무인점포, 무인 단말기,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반려 로봇, 가사도우미 로봇 등 자동화의 물결이 일상에 밀려들고 있다.

2012년 KIST(한국과학기술원) 1호 기술 출자회사로 시작한 ㈜로보케어는 고령자와 발달장애를 돕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단체용 치매 예방 로봇 '실벗'을 개발해 상용화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원을 중심으로 치매예방 로봇 공급에 나서고 있다.

(주)로보케어 측은 요즘과 같은 비대면 상황의 지속과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케어 인력 부족 문제와 우울감을 경감시켜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 공급중이라고 밝혔다.

'실버세대의 벗'이라고 지어진 이름의 '실벗'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전문의들과 신경심리 전문가가 공동 개발한 콘텐츠를 탑재한 로봇이다. 고령자 및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두뇌 향상 콘텐츠를 제공해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그룹형 인지훈련 시스템이다. 개인별 치매·우울 검사에 따라 학습난이도를 설정하고 콘텐츠별 단계도 적용할 수 있다. 장보기 기능이 있어 구입한 물건을 계산하거나, 단어 짝 맞추기 등으로 뇌 기능을 높이는 20종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또 음성지원으로 음악과 함께 사람의 동작을 로봇이 인지해 함께 춤을 출 수도 있다.



고령자 및 치매위험 어르신 위한 ‘돌봄시스템’ 탑재돼

‘실버’이 그룹형 인지훈련 로봇이라면, ‘보미1’과 ‘보미2’는 1:1 개인형 인지훈련 시스템 로봇이다. 보미1은 국내 유일의 탁상용 인지훈련 로봇으로, 뇌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기억력 호전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을 마친 제품으로 만세하기, 박수치기 등 사용자 모션 인식, 22종의 아바타 기능, 사용자와 로봇간의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보미2’는 ‘보미1’의 기능에 고령자 및 치매위험이 있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돌봄 기능이 추가로 탑재된 가정용 케어 로봇이다. 로봇에 탑재된 다양한 두뇌향상 콘텐츠를 통해 인지훈련이 가능하고, 고령자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응급 상황 발생시 지인, 경찰서, 119 등에 즉시 알릴 수 있는 알림 기능도 갖추고 있어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고 복약알림 기능 등이 탑재돼 어르신 돌봄에 특화된 로봇이다.

이 외에도 로보케어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 로봇 등도 개발·생산하고 있다. 송상수 경영혁신팀 팀장은 “최

근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비대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보케어는 다년간의 로봇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 개발에 주력하면서 4차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의 기대가 크지만 기술개발, 연구 진행과정,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적지 않다. 김덕준 대표는 “과거엔 사업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에만 집중한 연구개발을 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수요와 부합하지 않고, 수익성은 악화되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로봇의 경우 각종 표준이나 규격 등이 특정 제품에 편중되어 있어 개발, 인증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전체 로봇 시장이 크지 않아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로봇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체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김 대표는 “기존 교육·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로봇 플랫폼에 접목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머지않은 미래에 1인 1로봇 시대를 기대한다고 밝힌 그는 로봇 시장의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의 관심, 특화된 기술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과 기업의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



(주)로보케어의 로봇 제품을 설명하고 있는 김덕준 대표

글 윤성혜 사진 김지범

NEWS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 신년 인사회 참석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2022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공동체,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 ‘성장’을 넘어 ‘성숙’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위기의 강을 건널 희망의 다리를 놓겠다”며 “국회는 국민과 발맞추며 ‘호시우보’의 자세로 국민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외교’

박병석 국회의장이 1월 13일 의장집무실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발이 묶였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정상 운항과 관련해, 나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

박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있는 한국 항공기가 곧 한국으로 출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50여 명의 한국인과 카자흐스탄 외교관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



원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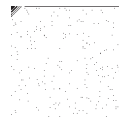
이에 니그마툴린 의장은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교관 등 외국인과 외국 기업 등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시아나 항공기의 이륙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양국의 협력관계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200여 개의 한국기업과 한인들, 고려인들에 대한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1월 25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 자문위원회가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그 동안 우리가 지혜를 함께 모은 것들이 다음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활동기간 동안 총 5회의 전체회의 및 8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5일 간담회에서 결과보고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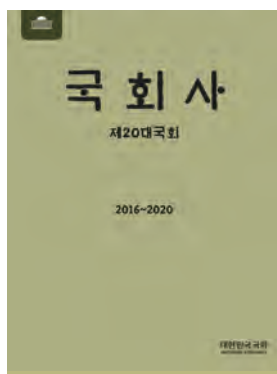


자문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을 대북, 대내, 대외, 국회 내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국회회담의 지속적 추진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남북간 방역&보건분야 등 인도협력 추진방안을 강조했고, 대내적으로는 초당적 대북정책 협력 체제 구축과 국민적 합의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과 다자 의원외교 추진 등을 제안했고, 국회 내부적으로는 국민 여론 수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 기능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제20대 국회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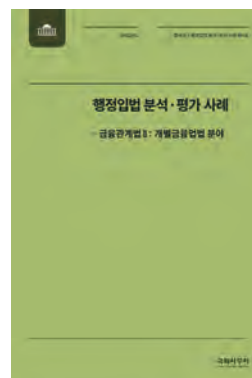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제20대국회(2016.5.30.~2020.5.29.)의 역사를 기록한 ‘제20대 국회사’를 편찬했다. ‘제20대 국회사’는 제20대국회에서 활동한 국회 수석전문위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해 원고를 작성하고, 자문·교열위원의 검수를 거쳐 4년간의 족적을 빠짐없이 기록한 대한민국 헌정사의 귀중한 사료다.

‘제20대 국회사’는 총 4장의 편제로 구성되며 제1장은 제20대국회사 전반의 개황과 연도별 및 회기별로 국회 활동과 국내외 정세 등을 설명했다. 제2장에는 위원회별로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정한 주요 안건의 처리경과 및 결과를 상세히 기술했다. 제3장은 제20대국회의 활동을 요약한 통계를, 제4장 부록에는 제20대 국회의원 명단, 입법지원조직 및 주요 연설문 등을 수록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금융관계법 중 개별금융업법 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금융관계법 II : 개별금융업법 분야’를 발간했다. 전상수 국회입법차장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금융관계법령은 국



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해 그 중요성이 크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 정책운용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른 분야보다도 행정입법에 위임된 사항이 많다”며 이번 사례집이 금융 분야의 행정입법 개선과 함께 법치행정 실현 및 의회주의 확립에 일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검토해 총 26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다섯 가지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했는데,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령 용어·형식·체계 등의 미정비 5건,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4건, 포괄적 재위임 2건, 행정입법 부작위 1건이 있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17년부터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매년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금융일반분야(2021년 7월 발간), 개별금융업법분야(2022년 1월 발간)의 행정입법을 분석·평가해 2권의 금융분야 행정입법 사례집을 발간했다.

NEWS

국회 인사 -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권영진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강릉고, 경희대 무역학 학사, 경희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담당, 의사담당, 국회운영위 입법조사관, 행정실장, 농해수위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사과장, 국회운영위 입법심의관, 기재위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정성희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강릉여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
- 입법고시 13회, 행안위 입법조사관, 인사과장, IPU 파견,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행안위 전문위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 중동고, 서울대 영어영문학 학사, 미 TUFTS대 국제관계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 입법고시 12회, 외통위·교육위·농해수위 입법조사관, 국제국 의회외교정책심의관, 국제국장,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박태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전주 한일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국회사무처 국제국 국제협력과 협력2담당, 국회운영위·정무위 입법조사관, 의사국 의안과장, 의사과장,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국회운영위 입법심의관, 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 기재위 전문위원, 의사국장

송주아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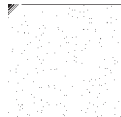


- 경기여고, 이화여대 영문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 경제학 석사, 송실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 입법고시 13회, 여성위·복지위 입법조사관, 프랑스 주재관, 교문위 입법심의관, 한노위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진선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수원 영복여고, 이화여대 법학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UC DAVIS) 법학 석사
- 입법고시 14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법사위·교육위·외통위 입법조사관, 관리국 관리과장, 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법제실 행정법제심의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 법사위 전문위원



관리관(1급)

유상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 서울 보성고,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법학 석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박사
- 입법고시 13회, 행정위·국토위 조사관, 입법조사처 기획팀장, 관리과장, 예결위 심의관, 외통위·국토위 전문위원, 의정연수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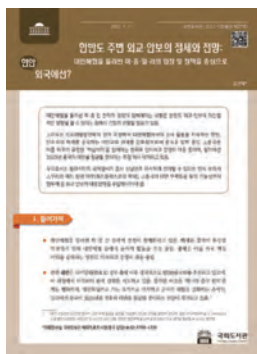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한안, 외국에선?’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월 11일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의 정세와 전망: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한안, 외국에선?’(2022-1호, 통권 제27호)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의 최근 긴장 상황을 요약하고 주변 주요국(미·중·일·러)의 입장 및 정책과 우리 외교·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첨예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향후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강경한 조치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일본과 호주 등 동맹국에 미군의 전략 자산을 확충(중거리미사일 배치 등)하는 것과, 미국의 대만 립팩(RIMPAC, 한태평양연합군사훈련) 초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대만 통일이 곧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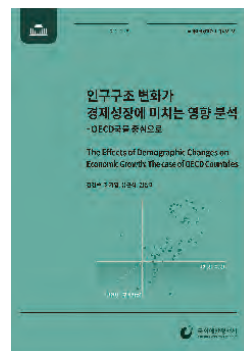
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그리고 공산당 집정 정당성 확보 등과도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대만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할 경우, 앞으로 미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은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에 대한 참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OECD국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0년대까지는 OECD 국가의

인구와 경제가 동반 성장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국가별, 지역별로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국가의 경우 연령대별 인구비중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2019년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패널 회귀분석 결과, 핵심노동 연령대인 30~64세 인구 비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5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하락할 경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0.3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해 총인구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OECD 국가들은 생산



NEWS

연령인구의 확충, 생산성 제고, 노동참여율 제고 등의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이주민(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주민 정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했다. 생산 및 서비스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 하락을 통제하고자 했으며, 자동화 과정에서 부문간, 연령별 균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층의 노동참여 증대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월 1일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새로운 여정’이라는 주제하에 30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한 데 모은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의 지난하고도 험난한 공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의 해’를 맞았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한 충격과 여파로 인해 국민의 삶이 크게 흔들렸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가진 긍정과 역동의 힘은 새정부와 함께 의연한 협력, 그리고 창의적 연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를 열어가기 기대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문야를 아우르는 다양하고도 폭넓은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 온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에 더 깊이 천착하고, 미래 전망을 더 크게 품어내고자 30개의 국가 주요 현안을 엄선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더 나은 국가로의 진일보라는 국회의 온당한 사명을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 담고자 노력했다. 보고서는 엄선된 30개 주요 현안을 선정해 미래 혁신, 환경 정의, 지속적 K-성장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갈등 통합, 국민의 일상 회복, 따뜻한 포용과 돌봄, 상호연대의 한 해를 전망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및 한국사회과학도서관과 업무협약식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사회과학도서관과 1월 1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MOU)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 기탁식을 가졌으며,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과 이재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및 기관 연구자와 관계자가 참여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행복과 삶의 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202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전국 단위의 한국인의 행복과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해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및 2021년도에 생산된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데이터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한국사회과학도서관에 기탁하고 연구자 및 국민에게 공개했다.



플라타너스 나무

커다란 나뭇잎은 온데간데 없이 하얀 수피(樹皮)만 드러낸 플라타너스가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잎이 넓다’는 뜻의 플라타너스의 한국식 이름은 양버즘나무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며 추위에도 강해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는 겨울이면 가혹하게 가지치기를 당하지만 이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이 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쓰인 것은 먼지와 매연에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플라타너스는 오존과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하는데, 한 그루가 하루 동안 3, 4명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며 15평형 에어컨 2~4대를 약 10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맞먹는 수분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임진완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차관급 정례회의

국회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2021년 12월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120분간 영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의미 있는 국제 교류행사로 2021년을 마무리했다.

전상수 국회입법차장과 쉬안바오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의 공동주재로 진행된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한국 국회와 중국 전인대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비교’를 주제로 홍정 법제연구분석과장과 장구이룽 행정법실 일급순시원이 양국 행정입법의 체계 및 입법통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조세법률주의 구현을 위한 세법상 행정입법 통제 방안 등 구체적인 양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영상회의에는 중국 측에서는 쉬안바오 부주임(차관급), 장구이룽 일급순시원, 옌둥핑 부주임 등 5인과 우리 측에서는 전상수 입법차장, 오창석 법제실장, 김영일 정치행정법제심의관 등 5인이 각각 참석했다.

국회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는 2006년에 체결된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상



이현정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지난해 12월 28일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간 정례회의’에서 전상수 입법차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호 초청·방문을 통한 정기 교류를 하며 양국 의회의 법제 지식과 입법정보를 폭넓게 교류해왔다. 당초 2020년에 예정했던 중국 측 방한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며 교류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중국 측에서 교류재개를 희망해왔고 우리 측에서 화상회의와 회의 주제를 제안한 결과 이번에 비대면 방식으로 교류를 재개한 것이다.

법제공작위원회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지도 아래 법률안 입안, 개정, 조사분석 및 심사 지원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무원이 송부한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및 사법해석에 대한 적법성 심사 또한 주요 기능 중 하나다. 현재 법제공작위원회는 선춘야오 주임(장관급)을 중심으로 판공실, 헌법실, 법규등록심사실 등 11개 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행정입법 통제체계의 특징

중국의 법령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중심으로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부문규장 및 지방정부규장 순의 위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부문규장, 지방정부규장이 행정입법의 범주로 인정되고, 이들 행정입법은 헌법, 입법법¹⁾ 등 법률이 정하는 일반권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행정입법 통제원리와 유사하다. 다만, 구체적인 통제방식과 관련해서는 우리와는 상이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률을 제정하기 전에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시행해 정책의 개별·구체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다. 입법과정에서 먼저 전인대의 수권

(예: ~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사실상 법률 제·개정을 예정한 상황에서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해 시행한다.

둘째, 직접적인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역시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를 통한 감독이 이루어진다. 다만,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접수된 행정법규가 헌법·법률과 저촉되는 경우 폐지 또는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폐지·수정 권한이 없는 우리 행정입법 통제제도와 차이가 있다.

셋째, 행정법규가 헌법 또는 법률과 상충되는 문제를 발견한 시민단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사를 제안할 수 있다. 2020년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대해 시민 또는 단체가 제안한 심사건수는 38건이며 전인대 상무위원회 관련기관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 후 제안당사자에게 회신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 법제공작위원회가 제2차 영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등 양국 법제지원기구 간 활발한 교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영상회의는 의장단 및 의원외교단체 간의 교류²⁾를 의회지원기구 간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로 심화·구체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1) 중국 입법법 제8조는 “법률로 정하여 하는” 11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을 통해 법률로 정하는 사항과 행정입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 12월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간의 화상회담이 이루어졌고, 2021년 11월에는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 제12차 합동회의가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바 있다.

2022년 달라지는 국회 출입 시스템

“국회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은 군인인가요, 경찰인가요?”

“국회 방문은 어렵지 않나요?”

처음 국회를 찾아오는 방문인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다.

오늘도 국회를 찾는 내방객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정문에 도착하면 시위자들의 외침이 소란스럽다. 외곽 출입문에는 경찰 제복 근무자들이 경직되게 서 있다. 국회 경내 각 청사의 면회실에 도착하면 철제 스피드게이트가 출입을 가로막는다. 줄을 서서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낯설고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 ‘통합방위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 정부 청사와 함께 국가 안보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전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사항이다.

경호기획관실은 국민의 편안한 방문과 의사당의 안전 확보라는 두 과제를 놓고 늘 고심한다. 지난해 2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후 첫 과제로 출입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지시했다. 국회 청사의 보안은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출입 시스템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전상수 입법차장을 위원장으로 출입제도개선TF를 구성해 기본 틀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사무총장이 사무처 차원의 TF를 확대 재구성하고 출입제도 각 사안을 직접 점검했다. TF에서는 주요 선진국 의회의 출입제도를 조사하고 국회 구성원 및 방문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방문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래 경호기획관

방문인 편의 중심으로 제도 개선

첫째, 일원화된 청사출입체계 구축이다.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청사출입제도개선추진단’을 벤처조직으로 출범해 출입 및 방문 담당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현재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출입증, 출입기자증, 방문증, 주차카



드 등 발급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 정부청사의 민원실 사례와 같이 출입절차 일원화를 도모했다. 그동안 출입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 주체가 없어 민원 사항 공유 및 개선 방안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을 추진한다. 온라인 방문 예약 시스템 구축은 방문대상 사무실 직원이 방문 예정자 및 주차정보를 사전에 등록·승인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바로 방문 예정자에게 예약완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방문 시에는 예약 번호와 신분증 확인만으로 방문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예약 시 차량번호도 사전 등록해 주차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초청방문인 주차 구역 91면이다. 소통관 지상 주차장에 공간을 마련해 방문인 주차 구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출입증 발급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출입증 발급 원칙을 준수하면서 예측 가능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출입권한이 예외나 특권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올해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모바일공무원증을 도입하고, 의원회관 회의참석자에 대한 QR코드 발급 운영 등 다양한 출입 편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외곽 경비시스템의 변화

현재 국회 외곽 출입문에서 국회 방문인을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 의무경찰이다. 그런데 정부는 2023년 5월까지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의무경찰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각 기관은 청원경찰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에서도 2019년 2월 ‘국회경비대 철수에 따른 외곽 경비 대책 T/F’를 구성해 청원경찰 도입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사당 주변에 격한 시위 농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의정활동 보호가 절실하고 국민과 국민이 자주 찾는 장소인 국회의 안전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집회, 시위, 테러 등 각종 치안상황 대응의 전문성과 즉시 강제력 등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외곽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청과 실무협의를 거쳐 1개 기동대 규모의 직업경찰이 앞으로 외곽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상주하던 의정에서 출퇴근하는 경찰로 대체되다 보니 인력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 외곽에 CCTV를 대폭 증설하고 출입문에 보안 시스템과 회전식 자동문 등을 구축해 경비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빈틈없는 외곽 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호기획관실에 외곽 경비 담당을 신설했다. 국회경비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경비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코로나19 국회방역대책’으로 사전방문예약제 실시 및 토론회, 세미나 등의 부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30여만 명이 국회를 방문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예전처럼 연간 70만 명, 하루 평균 2천500명 이상이 국회를 찾을 것이다. 경호기획관실은 의사당의 안전 확보와 내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 🏠

“

현장감·전문성으로 미래연구원 성장에 보탬 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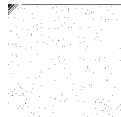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Q. 국회에는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일하게 되셨나요?

A. 저는 반도체 전공으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전자에서 회로 시뮬레이션 관련 업무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내 공모를 통해 기술 전략 업무로 전환했는데, 이때부터 전략, 정책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커리어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략을 다루다 보니, 보다 상위 개념이라 볼 수 있는 정부 정책에 관심이 생겼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이직해 에너지, 거대 과학 분야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과학기

술정책은 학문 특성상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부처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출연연구기관에서는 부처의 벽을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느끼던 차에 국회에 국회미래연구원이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마침 당시는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취득하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부처의 한계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제대로 할 수 기관이 생겼다고 생각했고, 운 좋게도 2018년 국회미래연구원의 창립 멤버로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Q. 국회미래연구원이 하는 일과 연구위원님의 업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5월 국회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창립됐습니다. 설립 근거인 국회미래연구원법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 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해 국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 삶의 질, 거버넌스 세 개의 연구그룹을 중심으로 중장기 미래 전망 연구, 기후위기, 불평등, 국민통합 등 핵심 아젠더별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기관장을 도와 연구와 경영을 총괄하는 연구지원실장 업무를 수행했고, 올해는 혁신성장그룹 소속으로 복귀해 미래 전망, 이머징 이슈(사회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아이디어나 기술 등) 탐색 및 과학기술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국회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A. 작년 1년간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총괄 간사를 맡았습니다.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미래 의제를 국가가 중심이 돼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내외의 많은 분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였고, 보고서를 여야 지도부, 대선 후보, 국회의원, 주요 헌법기관장께 의장님 친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뿐 아니라 확산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국회가 중심이 돼 새로운 국가 미래상을 제시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연구자로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아직은 신설 기관에 속하다 보니 여전히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연구 성과로 열심히 홍보하고, 실제 의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와 인사이트를 많이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국회미래연구원의 최근 추진 사업과, 앞으로의 국회 생활 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A. 국회미래연구원을 더 많이 알리고,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 전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갱신해, 사회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미래 전망을 통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정례적으로 30년 이상의 장기 미래와 10년 이상의 중단기 미래 전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미래 전망 보고서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기관의 대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햇수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기관 연구진의 한 사람으로서 기관이 권위 있는 중장기 미래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준비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설계 과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느끼고 아는 존재 :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저 자 안토니오 다마지오(Antonio Damasio, 심리학자)

역 자 고현석

출판사 흐름출판

출판일 2021.8.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출현 자체는 자연적이고 살아 있는 유기체로부터 영감을 얻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생명체들의 문제 해결 능력, 운동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이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무척 난해하다. 전문가의 책이라 그렇겠지만, 그의 언어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저 몽상가의 글이라 여겨질 정도다. 대중적으로 쉽게 썼다고 해도 저자는 지식의 숲에서 자기만의 미로를 설계해 놓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의식과 마음의 불(不)확정성을 논하는 책이라서 더 어렵다. 내용도 난해하고 문장도 난해하다는 역자의 투정은 거짓이 아니다. 그 난해함을 하나하나 풀어보자.

생명 유지와 자연 선택의 법칙은 인간과 유기체들을 통할(統轄)하고 통제한다. 한때 공룡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멸종했다. 인간은 실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떤 기능과 전략이 있었던 것일까. 그 원인과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것은 이 책에서 저자가 탐구한 주요 내용이다. 그렇게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까지도 추적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존재(being), 느낌(feeling), 앎(knowing)의 세 단계에 대하여 집중한다. 이것은 인간의 발달과정과도 같다. ‘존재’는 모든 생명체의 등장 그 자체를 뜻하고, ‘느낌’은 외부와 내부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느낌들을 통할하는 의식체계가 곧 ‘앎’이라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앎’이란 ‘깨달음’이다.

저자는 ‘항상성(恒常性)’에 주목한다. 항상성의 요구에 따라 온갖 생명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며 진화해왔다. 인체 내의 박테리아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큰 도움을 주며 스스로 살아남았고, 땅 위의 나무는 땅 밑의 균들과의 협력 공생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따라서 항상성은 생명체가 생존을 위해 동원하는 온갖 방법을 뜻한다. 온도, 내부기관 활성화도, 영양 등이 항상성에 영향을 준다. 특히 ‘느낌’은 생존을 위한 감각 즉 배고픔, 목마름 등 원초적 상태를 파악하거나 공포, 분노 등 희로애락과 같은 정서적 상태를 파악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감정이다. 따라서 느낌은 생명체가 몸의 내부와 외부 상태를 빠르게 파악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우리 인간은 느낌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조합하는 의식이 있고, 의식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다. 의식은 어떤 느낌이 들면 즉각 발동한다. 의식은 생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와 본능이 있다. 의식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마음속 활동들이 내게 속하며, 내 소유이며, 나라는 유기체 안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마음은 의식과 별개로 움직인다.

마음은 자거나 깨거나,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

이 생명의 항상성을 위해 365일 움직인다. 이러한 마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가 오감으로 인식하는 외부 세계의 현상이다. 둘째는 내 몸 안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다. 내 몸의 내부기관의 상태 즉 내적 세계이다. 셋째는 골과 골격근 등 몸 그 자체다. 따라서 유기체가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위의 세 가지를 혼합해 항상성의 지도를 그려나감을 뜻한다.

느낌에서 마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앎’이라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느낌은 마음에 어떤 사실 즉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의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연결이 곧 ‘앎’이다. 느낌과 의식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고도의 연산 행위가 인간의 창의적 행동으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결론에서 미래 로봇의 세계를 추적한다. 그는 궁극적으로 느낌이 있는 로봇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 것이다. AI와 로봇에도 마음을 넣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로봇은 느낌이 없다. 로봇이 마음을 가지려면 그의 몸체에도 느낌과 감각을 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것은 항상성 측면에서 온갖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며, 향후 인간과 로봇도 상호 의존성에 의한 공진(供進)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물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

글 이대영(중앙대 공연영상학과 교수)

새길과 옛길을 눈앞에 두고

出門道路多 문 나서면 보이는 수많은 길들
縱橫不我測 이리저리 갈려서 알 수가 없네.
我今欲遠行 나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하니
須問曾行客 가봤던 이에게 물어야 하리.
徐徐逢路人 천천히 걸어가 경험자 찾아 만나
咨問青松側 청솔 아래에서 길을 물었네.
客曰君何往 어디를 가시려고?
答曰遊京邑 서울을 가려고 하오.
客乃指要路 그 사람 내게 요로를 일러주고
而言行有益 가는 길에 도움 될 거라 일러주네.
古路雖大道 옛사람 걷던 길이 큰 길이긴 하지만
不如今路直 곧게 뻗은 오늘 날의 새 길만 못하다나.
但行今人路 남들처럼 오늘 날의 길을 걷는 건
猶如假羽翼 날개를 빌려 단 듯 수월하다나.
彼客別我去 이렇게 일러주고 그 사람은 떠났는데
獨自踟躕立 나 홀로 서성이며 그 자리에 서 있네.
為見今古路 옛길과 지금 길을 내게 알려줬지만
無乃須差忒 아마도 그 사람 말 틀린 듯하네.
今路足輪蹄 오늘 날의 길에는 교통편 많고

古路饒荊棘 옛길에는 가시덤불 수없이 많네.
欲行今人路 남들 처럼 오늘 날의 길을 걷자니
恐背古人迹 현인들의 옛 행적과 어긋나고.
擬行古人路 옛사람이 걷던 길 따라 걷자니
今人笑迂僻 사람들 나더러 오활하다 비웃네.
又擬不出門 바깥출입 아예 그만둘까 생각하니
奈有饑寒逼 생활에 쪼들려 그럴 수도 없네.
哀哀於此情 슬프고 슬픈 이 내 마음을
悠悠蒼天色 아스라이 높푸른 하늘은 알까.
不避今人嫌 남들의 비난일랑 내 이제 상관 않고
路須行古陌 길 갈 땐 모름지기 옛길을 따라 가리.
古陌雖難遠 옛길은 비록 험하고도 멀지만
且保無蹶失 헛디터 자빠질 일 아무래도 없으리니.
勉哉自勉哉 노력하자 나부터 노력하자
前古難知識 옛사람이 걷던 길을 잘 알기는 어려워라.
不復見楊朱 기로에서 탄식한 양주의 마음은 모르지만
萬古凝愁魄 가슴에 가득하다 하많은 근심들이.

- 송(宋) 사마광(司馬光)이 쓴 '사마온공전가집(司馬溫公傳家集)' 권5(卷五) '금고로행(今古路行)' 중에서 -



얼마 전부터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문집을 읽고 있다. 거기서 만난 시가 ‘금고로행(今古路行)’. 풀어쓰면 ‘오늘날의 새로운 길과 옛길을 앞에 놓고 마음을 노래하다’쯤 된다. 시의 이해를 위해 ‘송사(宋史)’를 중심으로 그 배경을 찾아 본다.

1067년, 19세의 젊은 나이에 영종(寧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신종(神宗, 1048-1085)은 2년 뒤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을 참지정사에 임명하고 개혁에 나섰다.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두고 1070년 재상이 되면서 신법(新法)을 제정, 반포했다.

왕안석이 재상이 되어 신법을 반포하자 사마광은 예상되는 이해를 따져서 밝혔다. 그후 황제 앞에서 진강(進講)하면서,

“선대 조상들이 정한 법들은 바뀌서는 안 된다(祖宗之法不可改).”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집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집이 훼손되면 수리해서 사용한다. 크게 훼손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뜯고 새로 짓지는 않는다(司馬光列傳).”

신종은 조정의 양대 세력인 왕안석과 사마광을 함께 써서 협치(協治)를 통해 기울어가는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생각을 갖고 왕안석의 의견을 구했다.

“사마광이 주장하는 내용은 시정(施政)을 해치는 것들이고, 함께하는 사람도 모두 시정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개혁 앞에서는 천상(天象)의 변화도 두려워할 게 없고, 조상 때부터 시행한 원칙도 꼭 지킬 필요는 없으며, 만

대자들의 의견과 공격도 고려할 게 없다(王安石列傳).”

신법의 시행과 관련해 추진세력이 가져야 할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마광을 중용해서는 개혁이 실패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삼부족론(三不足論)이라 불린 이 말은 신법 추진세력의 캐치프레이즈와도 같은 상징적 구호였다.

황제는 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마광을 재정과 군사관련 요직인 추밀사(樞密使)에 임명한다. 1070년 2월이다. 사마광은 6차의 사직소를 올린 끝에 허락을 받아 개봉(開封)을 떠나 낙양(洛陽)으로 돌아가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편찬에 진력해 1085년에 편찬을 마친다. 시작부터 치면 19년이 걸린 대역사였다. 신법은 국가의 부족한 재정 확보와 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조치로 일정부분의 효과는 있었으나 실패한 개혁이었다.

위의 시에서 새로운 길은 신법, 옛길은 구법을 지칭한다. 이를 미루어 신법 초기인 1070년의 상황을 반영한 시로 추정된다. 가본 적 없는 새길과도 같은 신법 열차의 동승을 거부하고 조종의 법인 옛길을 가겠다는 성명서라는 생각이 든다.

읽다보면 엄동에 버티고 선 장송(長松) 같고, 몰아치는 격랑 속의 중류지주(中流砥柱)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새 봄을 맞아 새 출발을 앞둔 이들과 함께 읽고 싶다. 행운을 빌면서.

글 신승운(한국고전번역원장)

‘카간’이자 중국 ‘황제’로 800년 넘게 중앙아시아 호령한 거란 제국



한자어로 계단(契丹)이라고 적고 우리나라에서 ‘거란’으로 부르는 부족 집단은 역사 기록상 4세기 말부터 등장한다. 거란의 발원지는 지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와 랴오닝성을 가로지르는 요하(遼河)의 상류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고비사막과 연결되는 척박한 땅이었다. 이 곳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거란은 대하(大賀), 요런(遙輦), 질탈(迭剌) 등 다양한 부족 집단의 연맹체였다.

거란이 국가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당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당 측에 가담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거란군의 지휘관이었던 대하부 출신 굴가(窟哥)는 당나라 측에 의해 장군으로 등용됐고, 648년에는 당 태종이 수립한 기미(靺鞨) 체제 속에서 송막도독(松漠都督)의 직을 맡아 전 거란인을 통할하게 된다. 이후 요런부 출신 지도자들이 돌궐제국 군주의 칭호인 ‘카간’을 자칭하면서 당

나라에 반기를 들고 부족을 규합했다. 755년 중앙아시아 출신 소그드인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반란은 당나라의 통치력 약화를 불러와 거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 통치한 거란의 야율아보기

거란은 질랄부 출신의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906년 통치권을 장악하면서 ‘제국’으로 변모한다. 야율아보기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거란은 돌궐, 위구르계의 조복(阻卜), 티베트계 토훈(吐渾)과 탕구트(黨項), 몽골계의 실위(室韋) 등을 정복하며 북아시아의 패자로 부상한다. 우리 민족에게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925년 발해(渤海)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것도 야율아보기였다.

그는 기존 ‘카간’의 칭호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였다. 916년에는 황제(皇帝)에 취임하고 중국식으로 연호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다른 유목집단 군주들과 스스로를 구별했을 뿐 아니라, 당(唐)나라 멸망 이후 거란 지역으로 이주한 많은 중국 유민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인 제도에 국한된 것으로, 문화적으로 거란의 중국화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910년부터 거란 자체의 문자를 창제하여 사용했으며, 국가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통치하되 각각 거란 왕실 유력 인사들을 임명해 거란인의 통치를 확고히 했다. 이후 야율아보기를 계승한 그의 아들 태종(太宗)이 936년 대요(大遼)라는 중국식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거란인들 사이에서는 ‘거란’의 국호가 변함없이 사용되었다. 심지어 983년 공식국호도 ‘요’에서 ‘거란’으로 복귀한 것도 이러한 민족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기 틈타 북중국 지역 진출

거란 제국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이른바 오대십국(五代十國)의 혼란기를 틈타 북중국 지역에 진출한다. 936년 후당(後唐)의 장수 석경당(石敬瑭)이 반란을 일으키며 거란에 지원을 요청하자, 거란은 즉각 군대를 파병하고 그 대가로 만리장성 이남 연운(燕雲) 16주, 즉 현재의 베이징(北京) 및 다통(大同) 지역을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 거란은 다섯 곳의 수도를 유지하는 오경(五京) 중 서쪽과 남쪽 수도를 이 지역에 설치해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거란의 남경(南京)이 오늘날 베이징에 설치됐었는데, 이러한 전통은 훗날 금나라, 원나라에 이어져 베이징이 현재 중국의 수도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거란은 북중국 일부와 중앙유라시아 초원 전체를 장악하는 위세를 떨쳤다. 이 시기 아랍-이슬람 제국에서 사신을 보낼 정도였다. 거란의 한자어 발음 ‘계단’은 아랍-페르시아어로 ‘키타’로 옮겨졌고, 이 발음이 북중국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된다. 그 영향을 받아 유럽에서는 캐세이(Cathay), 러시아에서는 키타이(Kitai) 등의 발음으로 중국을 가리키게 되었다. 당시 중국 전역을 다스리던 송(宋)나라를 제치고 거란이 중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2019년 카스피해 인근에서 발견된 카라키타이 인장. 거란 대자로 1197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V.A.Belyaev et al.

여진족에 진 뒤 카자흐 초원으로 이주, 새 왕조 세워

거란의 요나라는 고려를 993년부터 1019년에 걸쳐 3번이나 침입하는 등 위세를 떨쳤지만, 약 100년 후인 1115년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여진족에 의해 멸망한다. 하지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건국이 거란 국가와 민족의 생명을 끊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거란 왕족의 일원이었던 야율대석(耶律大石)은 일부 거란인과 함께 몽골 초원을 거쳐 오늘날 카자흐 초원 일대로 이주한다. 당시 이 일대에는 카라한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다. 야율대석의 지도 아래 거란인들은 카라한 왕조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카라한 측 요청으로 이란 지역에서 쳐들어온 셀주크 왕조의 군대도 격파한다. 야율대석은 이곳에 거란인의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데 이를 중국 측 자료에는 서요(西遼), 아랍-페르시아어 자료에는 카라키타이(Qara Khitai)라고 부른다. 카라키타이 왕조는 이후 몽골 제국 출현 직전까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로 자리잡게 된다.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지 오래된 카라한, 셀주크 왕조의 패퇴 소식은 유럽 기독교 국가들에게도 전해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십자군 전쟁을 치르던 유럽 기독교인들은 이를 두고 또 다른 전설적인 기독교인 왕인 ‘사제왕 요한’(영어식으로 프레스터 존 Prester John)이 동



거란인들의 매사냥 풍습을 묘사한 출렵도(대만 고궁박물관 소장)

쪽에서 무슬림들을 공격한 것은 아닌가 하여 흥분하게 된다. 이후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제국이 건설되자 로마 교황청은 수도사들을 파견하는데, 이들은 ‘사제왕 요한’에 관한 전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서요, 즉 카라키타이를 건국한 야율대석이 기독교도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그의 휘하 가운데 동방기독교, 즉 네스토리우스(Nestorius) 교도 유목민들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몽골제국이 흥기하던 13세기 초 기록을 보면 케레이트(Kereit)라는 강력한 유목집단이 몽골 초원에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네스토리우스 교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거란은 몽골초원-서아시아-유럽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4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오랜 시간 거란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돌궐과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높은 민족 자존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지킨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조사 ‘-의’를 사용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도 곰곰이 따져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제법 있다. 일상어를 구사하는 것은 관용적인 데가 많기 때문에 평소 내가 사용하는 문장이 문법에 맞는지 혹은 앞뒤 문맥이 잘 호응되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 점에서 일상어는 문법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에 맞는 언어 환경 역시 중요하다.

중·고교 시절 우리 문법을 배우면서 어려웠던 것은 조사 ‘-의’의 용법이였다. 우리말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사용하지 않은 채 글을 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조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기미독립선언문’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처음 이 글을 접했을 때 ‘-의’는 무슨 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선뜻 파악할 수 없었다. ‘기미독립선언문’은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 보이는 ‘-의’는 주격조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요즘 익숙한 글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노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한문세대와 한글세대 사이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다. 이원수의 시에 흥난파가 곡을 붙인 작품이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로 시작된다. 이것도 ‘내가 살던 고향은’이라고

쓰면 더 자연스럽다.

‘-의’를 사용할 때 불필요한 곳에 쓰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며칠 전 읽은 신문기사의 문장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꿈꾸었던 인생의 8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평생도’를 소재로 한 디지털 콘텐츠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문장에 나오는 ‘인생의 8가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하나는 ‘8가지’인데, 이는 ‘여덟 가지’로 써야 한다. 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를 섞어서 쓰는 것은 우리말 사용법에는 맞지 않다. 또 하나는 ‘-의’를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문장에 나오는 ‘인생의 의미’에서 ‘-의’는 적절하지만, 앞에 나오는 ‘인생의 8가지’에서는 잘못됐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말이 안 된다. 의미 전달이 어찌어찌 되었을지는 몰라도 문법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문장이다. 이 부분은 ‘… 인생 중에서 여덟 가지…’로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동안 우리말을 문법에 맞고 아름답게 쓰자는 운동이 오래 일어나면서 많이 지적된 조사 중 하나가 ‘-의’였다. 그 덕분인지 이제는 제법 많이 고쳐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문서에서는 불필요한 곳에 ‘-의’가 들어가는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하찮게 보이는 조사 하나라도 신경 써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우리 생각을 명확하고 깊게 만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청와대 습격 사건’을 둘러싼 대정부 질의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청와대 습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아래는 1·21 사태 때 유일하게 생포된 무장 공비 김신조가 본인의 자서전(‘나의 슬픈 역사를 말한다’)에서 밝힌 ‘청와대 기습 사건’의 과정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1968년 1월 18일 새벽 2시경, 특수훈련을 받은 31명의 최정예요원인 우리는 휴전선 군사분계선 앞에 섰다. 미군이 주둔한 지역의 철책선을 끊고 하나하나 철조망 밑으로 엎드려서 빠져나가 철책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 작전의 가장 힘든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기쁨에 우리는 서로 악수를 나누었다. (중략)

남쪽으로 계속 행군을 하여 비봉 북방 기슭에 다다르니 20일 새벽 5시였다. 우리가 풀어준 나무꾼들이 신고했는지 하늘에 헬리콥터가 시끄러운 엔진음을 내며 분주히 날아다녔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각자 기관단총과 권총, 탄환, 수류탄, 단도를 차고 그 위에 바바리 코트를 입자 드디어 남반부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지도 모를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이 느껴졌다.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 속에 가로등도 없는 길을 계속 걸어 세검정 사거리에 있는 검문소를 지나 자하문 고개를 넘어가는데 종로경찰서 서장이 신분을 밝히라며 앞을 가로막고 나섰다. ‘누구냐?’ ‘우리는 CIC(특무대)다.’ ‘왜 신분증이 없는가?’ ‘부대에 두고 나왔다.’ ‘어디 갔다 오는가?’ ‘작전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다.’ 하며 서로 옥신각신하는 중 청와대 쪽에서 병력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따따따따’ 경찰서장을 향해 사격이 시작되고 이어서 어깨 위아래로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교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하문 고개 너머로 버스가 들어오고 있었다. 시내 버스였지만 우리는 그 차를 지원 병력을 실은 차로 오인해 수류탄을 까서 던졌다. 다른 대원 두 명과 함께 교전을 하면서 인왕산 쪽으로 올라갔다. 목전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와 목을 죄는 것 같았다. 아, 꿈이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모든 무기를 버리고 수류탄 하나만을 집어 들고 세검정 계곡 바위틈에 숨어 있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나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마이크 소리가 들렸다. ‘나오면 살려 준다. 손 들고 나와라.’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 곤욕과 멸시를 당하다가 배신자가 되어 죽지 말고 잡히면 자폭하라.’ 지도원의 말이 생각났다. 수류탄을 집어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러나 마음 저 밑바닥에선 그래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왔다. 생사의 기로에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내 나이 스물일곱, 푸른 청춘. 내 생명은 하나,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그만이다.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이미 두 손을 치켜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날 대한민국 조야는 발칵 뒤집혔다. 무장공비가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중단되고 금값이 오르고 예금을 찾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회는 1968년 2월 1일 소집되자마자 본회의 첫날 관련 장관들을 불러 보고를 들었다.



○국무총리 정일권

(중략)

따라와 가지고 청운동 과학수사연구소 앞에서 이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에게, 지금 자기가 데리고 온 대원들에게 하차를 명하고 전투태세를 취하도록 하는 일방 전 차량 라이트를 이들에게 비치고 제일 뒤에 떨어져 가는 한 놈을 붙잡고 검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놈 말이 우리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CIC 대원인데 검문이 무슨 검문이나 이렇게 하면서 검문에 응하지 안하는 순간에 옷 속으로부터 기관단총 총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장간첩인 줄 알고 세 사람이 대들어서 손을 비틀고 넘어뜨리고 그 기관총을 빼는 순간 그자가 수류탄을 빼어드는 통에 서장은 앞드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권총을 발사해 가지고 그놈을 총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며 그때 무장간첩들은 인왕산 방면, 청운동 방면으로 분산 도주를 했습니다.

(제63회 국회 제1차 본회의 p.5)

이튿날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장 공비의 침입 상황에 관한 질의를 계속했다. 당시 공화당의 이만섭 의원은 무장 공비 침투신고를 받고도 왜 제대로 검문하지 못했느냐고 질문했다.

○이만섭 의원

(중략)

쉽게 얘기하자면 19일 날 법원리에서 민간인이 무장공비가 서울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21일 날 밤 청와대 800미터 앞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19일 날 신고를 받고 21일 날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검문을 하지 못하고 전연 모르고 있었느냐. 여

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아직 석연하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어제 국방부 장관은 얘기하기를 ‘하필 수사를 할대로 다 했는데 하필이면 비봉이라는 봉우리만 빠뜨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왜 하필이면 비봉이라는 봉우리를 빠뜨렸습니까 하는 것을 다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63회 국회 제2차 본회의 p.15)

나무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군은 예상 구간에 병력을 배치하고 통제했으나 무장공비들의 이동속도가 너무 빨라 수색에 판단 착오가 생겼던 것이다.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준 1·21 사태는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침투로로 사용되었던 우이령길은 이후 폐쇄됐다가 41년만인 2009년 7월에 제한적으로 재개방됐다. 전군의 군복무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련수업이 생겼고 향토예비군도 창설됐다. 그리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지문까지 등록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계 소홀의 책임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은 대한민국에 1억 불의 원조를 했는데 그 돈으로 만들어진 155마일(약 250km)의 철책선은 아직도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어 분단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다. 🍵

글 장미경 서기관(국립국어원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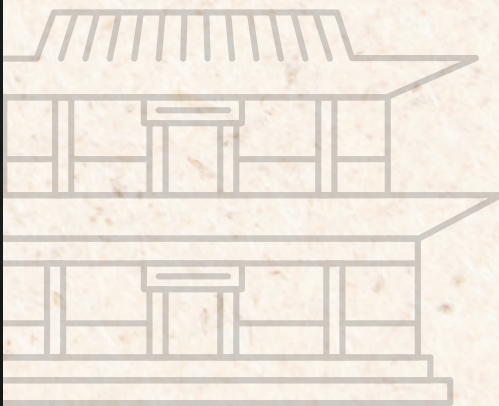




부마도위 박영효가옥 사랑채. 바람길을 낸 통(通)의 미학을 보여준다.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아서

한국 원류 사상 '풍류(風流)'가 낳은 '통(通)의 미학'



살림집은 우리 건축 가운데 '공간'의 뿌리를 이루는 건물 유형이다. 공간 가운데에서 일상생활을 담당하며 보통 대청을 중심으로 양옆에 부엌과 방을 갖춘 이른바 '초가삼간'이 기본 유닛에 해당한다. 이 유닛이 증식하면서 일단 흔히 한옥이라 부르는 반가(班家)로 발전한다. 이 외에도 의외로 궁궐의 대부분 전각, 서원과 향교의 명륜당과 동재-서재, 심지어 사찰의 요사채 등 전통 시대 대부분의 주요 건물은 이 초가삼간을 공간 구성의 뿌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살림집의 공간 특성은 곧 한국인의 공간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물리적 실체라 할 수 있다. 바로 ‘통(通)’이라는 공간 구조다. 한국적 공간은 물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통의 미학’을 들 수 있다. 초가삼간이 너무 작다면 유명 한옥을 예로 보자. 한옥에서는 동선이 끊이지 않고 원처럼 빙빙 돈다. 뒤로 돌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가도 집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독특한 공간 구조를 하고 있다. ‘통의 미학’은 ‘원통형(圓通形) 공간’으로 발전한다.

원통형 공간의 비밀은 여러 가지다. 일단 한옥에서는 방들이 작다. 99칸 대감택이라 해도 안방이나 사랑방 자체는 정작 작다. 그 대신 마당을 넓게 쓴다. 한옥에서는 마당까지가 실내 생활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다 보니 수시로 마당을 드나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만든 기묘한 장치가 ‘창문’이다. 창문이라는 말부터 특이하다. 서양에는 없는 말이다. ‘창’이면 창이고 ‘문’이면 문인 건데 우리는 둘을 합해서 하나로 본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방과 마당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다 보니 둘을 구별하지 않는 게 더 편리했기 때문이다. 급하면 창으로도 드나들다 보니 창이 문도 되고 해서 ‘창문’이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한옥의 방에는 창문이 이곳저곳에 여러 개 뚫려 있다. 특별한 규칙도 없다. 굳이 있다면 ‘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지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절정이 남아 있다. 이런 여러 창문이 양꼬치나 산적처럼 일렬로 꿰어져 늘어서는 구성이다.

이 대목에서 ‘대청’이 개입한다. 대청은 누정 공간을 살림집에 이식한 건데, 누정이 실내도 실외도 아닌 제3의 공간인 것처럼 대청도 그렇다. 살림집 공간 속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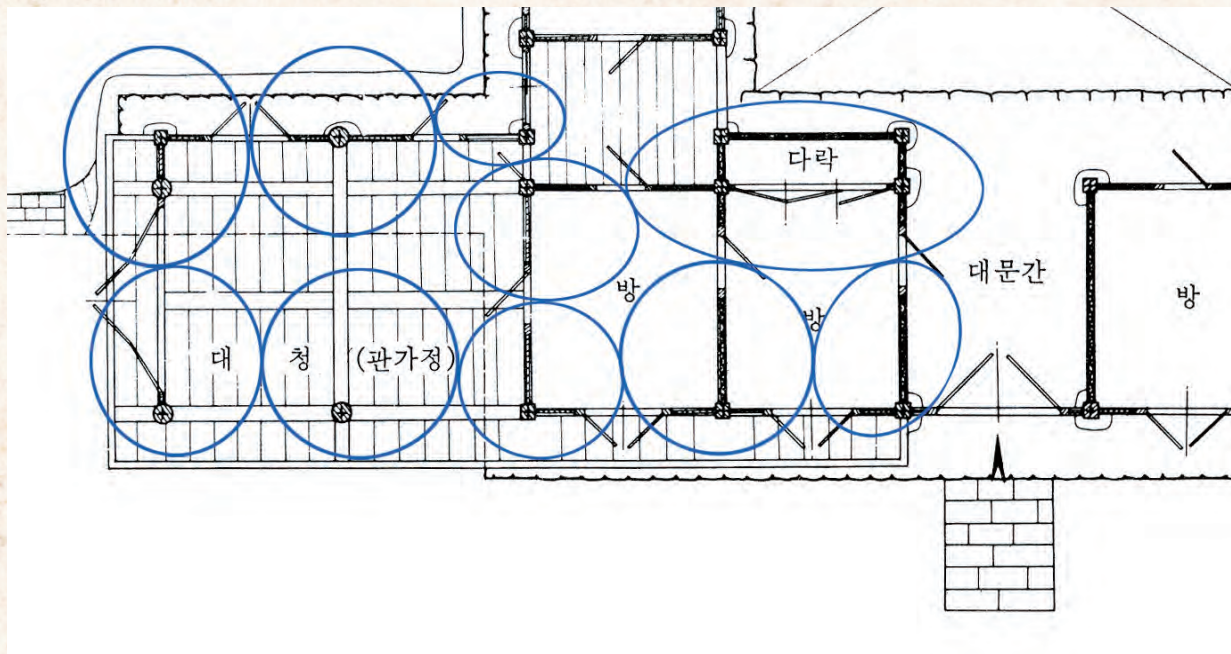
역할을 굳이 정의하자면 ‘실내 마당’ 혹은 ‘실외 방’ 정도가 될 것이다.

이로써 통의 미학, 즉 원통형 공간이 완성됐다. 창문을 모두 열면 ‘저쪽 마당-저쪽 방의 저쪽 면(마당 쪽) 창문-저쪽 방의 실내-저쪽 방의 이쪽 면(대청 쪽) 창문-대청-이쪽 방의 저쪽 면(대청 쪽) 창문-이쪽 방의 실내-이쪽 방의 이쪽 면(마당 쪽) 창문-이쪽 마당’의 긴 ‘공간꼬치’가 완성됐다.

무려 마당, 창문, 방의 실내, 대청 등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9개의 공간 단위가 일렬로 늘어섰다. 이 때문에 한옥은 자칫 건물 열개가 영성해 보인다. 영성하다 못해 짓다 만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집 구조가 사실은 ‘통의 미학’을 담고 있는 ‘원통형 공간’인 것이다.

원통형 공간의 정신적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한국 정신문화의 원형(原形)인 ‘풍류(風流)’ 사상이 그 바탕에 있다. 한국 전통사상의 뿌리를 보통 유불도라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중국에서 건너온 외래 사상이다. 그 전에 우리 고유의 원류 사상이 먼저 있었는데 바로 ‘풍류’ 사상이다. 단순히 유홍문화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신교(神敎)’ 문명을 바탕으로 ‘천지인(天地人)’의 가치 구도를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이다. ‘풍’과 ‘류’의 두 단어부터 보자. ‘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자연사상에서 ‘풍’은 하늘의 기운을 상징한다. 무한한 우주 공간 속에 하늘의 기운이 불어 생명을 낳는 근원으로 본다. ‘류’는 이것을 땅에서 받아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상징한다. ‘풍’의 강도와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시간과 사태의 흐름을 말한다.

이로써 ‘풍=하늘=공간=생명’과 ‘류=땅=시간=자연 상



관가정 사랑채. 수많은 작은 원형 동선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통형(圓通形) 공간을 보여준다.

태'의 쌍개념이 구축되었다. 인간은 이런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합일한 존재로서 이를 근원으로 삼아 현실 세계에서 일상을 살며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영위한다. 이것이 한국의 위대한 원류 사상, '풍류'다. 이원론을 갈등의 대립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삼원론 혹은 일원론으로 승화시킨다.

인간이 그런 승화의 결정체다. 신(神)과 정(情), 영(靈)과 혼(魂), 원(圓)과 방(方)은 모두 하늘과 땅의 이분법이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상징화한 한 음절의 개념어들이다. 인간은 이런 이분법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합한 존재다.

집 안에 '바람길'을 낸 한옥

한옥의 '원통형 공간'은 이런 풍류 사상을 근원적 뿌리로 삼고 있다. 짓다 만 것 같은 영성한 구조는 사실 때

우 위대한 목적을 갖는다. 바로 '바람길'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집안에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낸 것이다. 우연일까, 마침 그 '바람'이 '풍류'의 '풍'과 같다. 또 있다. '원통형 공간'의 '원'이 천지 이분법의 '원'과 같으며 방을 이루는 사각형은 '방(方)'과 같다.

정리해보자. 한옥은 '천원지방(天圓地方)'의 '방(方)'으로 이루어진 땅의 '류'로써, 그 사이를 '원'에 해당하는 하늘의 '풍'이 자유롭게 '통'하면서 생명을 낳고 키우는 공간이 된다. 이로써 '풍·류·통'의 삼원론이 완성되었다. '천지인'의 철학 삼원론을 살림집의 생활로 치환한 공간 삼원론인 것이다. 🏠

글 | 사진 임석재(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순백 자작나무 숲의 고요한 속삭임, 위로가 되다

원대봉

눈 내리면 떠오르는 ‘겨울 맛집’이 있다. 허전한 뱃속을 채워주는 식당이 아니라 일상에 지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곳, 나의 겨울 맛집 강원도 인제 원대봉이다. 그곳에 다녀오면 순백의 겨울 풍경에 마음속 생채기가 아물고 무거운 어깨 위 짐 하나 내려놓고 돌아온 기분이라면 좀 과장일까.

산이 높고 험하기로 유명한 강원도에서 원대봉(884m)은 지극히 아담하다. 이름 없이 무명산으로 불리다가 원대리에 걸쳐있다는 이유로 원대봉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동네 뒷산 같은 곳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찾는 발길이 꽤 길어졌다. 이유는 단 하나. 원대봉 깊숙한 품에 보물 같은 자작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작나무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정겹게도 껍질을 태울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 북유럽에서는 자작나무의 큰 키와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강원도 인제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

우아한 그 모습에 반해 ‘숲의 여왕’으로 불린다. 한겨울 잎이 떨어지고 험벗어도 여왕다운 고고한 기품이 넘치기 때문이다. 자작나무 껍질은 천년동안 썩지 않는다고 한다. 문학작품의 소재로 사랑받는 이유가 참 많다.

북유럽 추운 지방이 고향이라 자작나무숲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다. 그나마 강원도에서 볼 수 있는데 제대로 군락을 이룬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원대봉 일대에는 자작나무가 능선을 따라 60만 그루나 펼쳐져 있다. 1970년대까지 화전민들이 살았지만 오래전 모두 떠나고 그 빈자리를 자작나무가 채우고 있다.

새하얀 수피와 은빛 설경이 어우러져 파도처럼 물결치다

‘숲의 여왕’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탐방소에서 자작나무숲까지 3.5km의 임도를 따라 꼬박 1시간 이상 올라가야 한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큰 어려움이 없다. 임도가 잘 닦여있어 등산이기 보다 트레킹이 더 어울린다. 그래도 겨울엔 눈이 많이 쌓여 있고 급하진 않아도 오르막이 쉽 없어 등산화와 아이젠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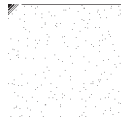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지루하지 않다. 산허리를 끼고 천천히 오르다보면 길 옆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는 자작나무 무리가 나그네를 설레게 한다. 코너를 돌 때마다 등장하는 풍경은 마치 교향곡의 전주곡 같다. 본 무대가 시작되기 앞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준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르고 계곡 아래로 펼쳐진 광활한 자작나무숲을 만나게 된다.

자작나무숲과의 첫 만남은 짜릿하고 황홀했다. 수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30여 m의 높이로 하늘을 향해 쪽 뺨은 모습은 신비로웠고, 새하얀 수피가 은빛 설경과 어우러져 파도처럼 물결치는 황홀경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 감동은 한 두 그루의 관상용 자작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보다 무리를 지어 숲을 이룰 때 더 아름다운 자작나무다. 그럼에도 어떤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쓸쓸하면서도 고고한 매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벽차오르는 풍경을 보고 어떤 이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차창 밖으로 펼쳐지던 자



눈과 자작나무



작나무숲과 닮았다며 어쩔줄을 몰라한다. 눈에만 담아 뒀던 그 풍경속으로 직접 걸어들어갈 수 있으니 감동은 더욱 커진다.

숲 탐방로는 크게 4개의 코스로 나눈다. 울창한 숲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자작나무숲 코스(0.9km), 혼요림과 천연림을 탐방할 수 있는 치유코스(1.5km), 숲과 계곡 임도를 함께 즐기는 탐험코스(1.2km), 능선을 따라 자작나무숲을 2시간 여 탐방하는 힐링코스(2.4km)다. 코스에 구애받지 말고 발길 닿는대로 걸으면 된다. 계곡 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자작나무숲의 전체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순백의 수직선들이 그린 수목화 같은 풍경

자작나무 사이로 눈 쌓인 오솔길을 따라 하얀 숲속을 걸으면 마치 순백의 동화 속 환상세계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눈 위에는 노루와 고라니 등 산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사방으로 자작나무가 뽁뽁한 고요한 숲의 한가운데에서 마음껏 공기를 호흡해본다. 자작나무는 피톤치드를 엄청나게 품은 나무로 유명하다. 핀란드 사람들이 자랑하는 상쾌한 자일리톨 향의 원료다. 그렇게 수많은 자작나무들이 앞다퉈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니 머리는 금세 맑아지고 가슴까지 시원 상쾌해진다. 어깨를 짓눌렀던 삶의 무거운 짐도 공기에 두둥실 실려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다.

하늘을 본다. 쪽쪽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나무들이 하늘과 맞닿는 곳에다 일제히 가냘픈 가지를 펼쳐놓고 있다. 파란 하늘에 그어진 그 무늬를 보고 푸른 창공으로 날개짓하는 새들을 닮았다고 찬사를 보내는 이들도 있다. 자작나무가 연출하는 고요하면서도 깊고 정갈한 숲의 풍경은 여백의 미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다.

겨울 자작나무 숲에서는 시간에 쫓겨 서두르려 하지



숲체험관

말고 굳이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눈처럼 하얀 도화지에 순백의 수직선들이 그린 수목화같은 풍경을 감상하면 족하다. 그 고요하고 쓸쓸한 풍경에 가만히 몸을 맡기면 어느새 번잡했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위안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어느 계절이라도 좋지만 새하얀 설경과 어우러진 한겨울 자작나무숲 풍경이 으뜸이다. 숲의 깊은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면 주말을 피해 혼자 훌쩍 다녀오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참고로 자작나무의 꽃말은 '당신을 기다립니다'이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 원대봉 자작나무 숲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 찾아가기

춘천~동홍천고속도에서 동홍천IC로 나와 44번 국도 인제 방면으로 방향을 잡는다 ▶ 38선 휴게소를 지나 남전교 직전에서 이정표를 따라 우회전해 10여 분 가면 탐방안내소가 나타난다 ▶ 내비게이션에는 강원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763-4로 입력한다.

휴일 : 월, 화 / 동절기엔 2시에 입장 마감
자작나무숲 안내소(033-463-0044)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는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과 혼란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부족 간의 내전과 정치적 불안도 원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사람에 해로운 수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에볼라 바이러스’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말라리아와 같이 아프리카의 풍토병 중 하나인데,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려는 것을 지금까지 아프리카 각국의 정부들과 국제 의료



진이 힘겹게 막아왔다는 이야기지,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로 창궐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니 방심하면 안 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옮는 전염병인데, 주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과일 박쥐들이 그 숙주 역할을 한다. 특히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아프리카에 흔한 정글에 살아가는 과일 박쥐들을 잡아서 식량으로 먹는 풍습을 지녔는데, 이 과정에서 박쥐의 몸에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이다. 실제로 1976년 7월 수단에서 발생한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도 유럽의 의료진들이 바이러스 전파 경로를 연구하던 도중에 남수단 은자라 지역의 숨 공장의 천장에 가득한 과일 박쥐를 발견하고는 이 박쥐들을 통해 사람에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쥐로부터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았다는 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는 2020년 이후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비슷하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침과 땀 같은 체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이 병이 무서운 점은 잠복기간이 꽤나 길다는 사실인데, 일단 감염이 되어도 최대 21일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동안 감염자가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활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는 것이다.

독감과 비슷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

잠복기가 끝나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독감과 비슷해 고열과 오한 증상이 느껴지다가 목이 붓고, 두통이 심해지며 관절과 근육과 가슴에 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이후 기침이 잦아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다가 혈관이 굳으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사망한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일단 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접근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는 곧바로 버리고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 죽은 사람의 시체는 다른 사람들이 접촉해서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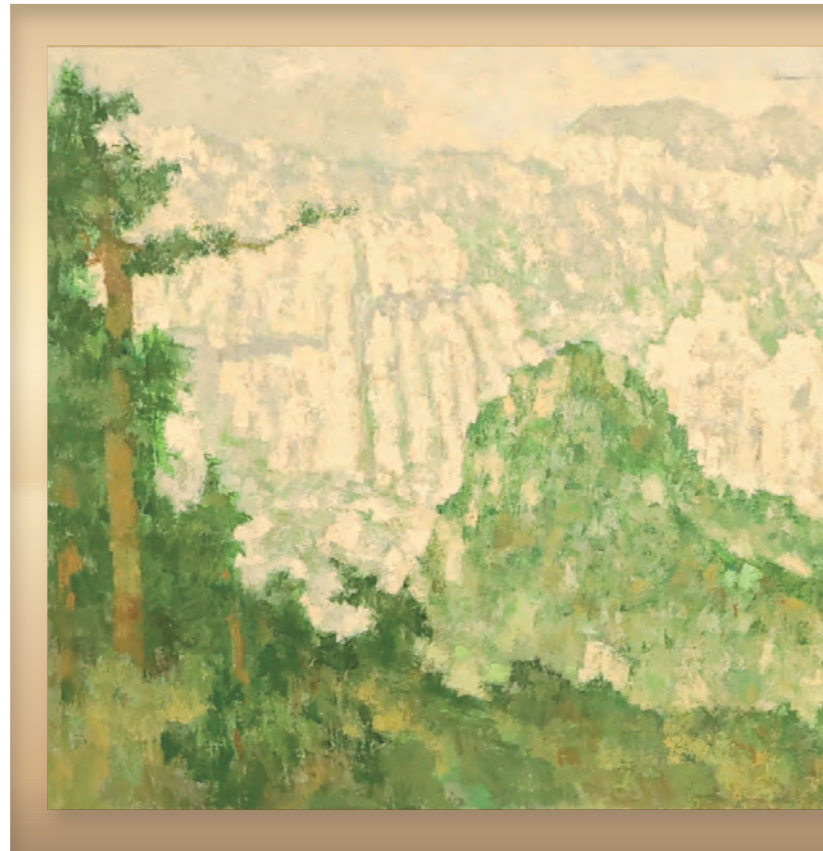
그런 이유로 1976년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에는 에볼라 환자들을 외부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죽은 시체들을 묻어버림으로써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창궐하는 것을 막았다. 반면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때에는 에볼라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하는 과정에서 조문 온 사람들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막지 못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크게 창궐하고 말았다.

아울러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거리를 최소 1미터에서 최대 3미터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에볼라 바이러스는 환자의 체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환자의 침이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아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사항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 유지를 하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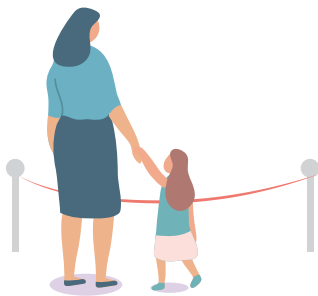
그 밖에도 에볼라 바이러스를 제대로 방역하거나 통제할 여력이 안 된다면 차라리 봉쇄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 실제로 1976년 수단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 이집트 정부는 수단과 통하는 모든 국경선을 봉쇄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국에 창궐하는 것을 막았다. 이는 이집트 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제대로 방역할 능력이 없었던 탓도 있었다. 🍵

글 도현신 작가

위대한 자연에 대한 헌사



강요배, '정양사망금강산', 서양화, 캔버스에 아크릴, 119×279cm, 2005



‘정양사망금강산(正陽寺望金剛山)’. 정양사에서 바라본 금강산이다. 이 그림은 화가 강요배가 추구해온 위대한 자연에 대한 헌사다. 한라산을 그려온 제주도 화가 강요배가 그린 금강산 그림이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하다. 제주도는 국토 남단의 섬으로서, 북의 백두산, 남의 한라산이라는 대표 산으로 대한민국 국토강역의 위 아래 틀을 잡아주는 지리적 서사의 한 축이다.

제주도 자연을 회화에 담아온 화가 강요배가 백두대간 한 줄기에서 빛나는 보석 금강산을 그려 한반도의 경이로운 자연을 예찬하고 있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다.



서울에서 작업하던 강요배는 마흔 즈음에 홀연히 서울을 떠나 고향 제주도로 귀향했다. 귀향 후 그가 한 일은 제주도 곳곳을 살살이 여행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섬 바깥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여행과는 다른 것이었다.

제주 풍경에 역사적 서사 녹여

강요배의 여행은 탐험이었다. 제주 섬의 자연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그가 체득한 것은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이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제주 자연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제주4·3의 역사의 비극을 추체험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부터 제주4·3연작을 길어올린 강요배는 이후 자연의 위대한 힘에 대한 찬사들로 화업을 이어갔다.

그의 그림은 정치적 풍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제주도의 풍경을 그리되 그 속에 제주4·3의 역사적 서사를 녹여낸 연작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제주도라는 한정적인 공간과 제주4·3이라는 특정 시간을 넘어서 대자연의 위대한 서사를 담아내는 화가로 진화해왔다.

자연 풍경을 그리되 그 속에 우주와 생명의 이치를 담아내고 나아가 형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강요배 예술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1990년

대 후반부터의 일이었다. 이 그림은 그러한 진화 과정 중에 탄생한 역작이다.

육로로 금강산 다녀온 후 작품 제작

금강산 유람선을 운행하기 전인 1998년에 남한 화가로서는 처음 금강산을 방문한 강요배는 육로로 명산을 다녀온 후에 이 작품을 제작했다.

금강산은 예로부터 문인과 화가들이 필생의 소재로 삼았던 명소다. 조선 시대의 산수화는 대체로 중국의 산수화를 베껴 그리던 것이었는데, 겸재 정선 이후 진경산수라고 하여 조선의 화가가 실재 눈으로 보고 느낀 산수를 그린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세기 겸재의 금강산 그림 이래 근대기의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등 많은 화가들이 금강산 그림을 통해서 한민족의 자긍심으로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해왔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힘을 공감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겸재의 ‘금강전도’ 이후 금강산 그림은 꾸준히 특별한 화제로서 지위를 확립했다. 특히 식민지 시대에는 금강산 관광이 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철도 개통을 계기로 금강산은 가장 각광받는 관광 장소로 자리잡았고 이후 기행문과 사진, 그리고 그림으로 재현한 금강산 이미지가 다량 생산됐다.

사진 이미지가 금강산을 재현하기 이전에는 겸재의 ‘금강전도’에서 보이듯 부감법으로 전체를 보여주는 데 관심을 두었지만, 사진이 재현하는 금강산 이미지가 등장한 이후에는 풍경의 부분을 과감하게 강조하거나, 이전에 등장하지 않던 소재들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가 생겨났다.

강요배의 이 그림과 같은 화제의 그림이 있다. 고암 이응노의 ‘정양사망금강(正陽寺望金剛)’이다. 수묵에 담

채로 마무리한 이 그림은 이응노 특유의 섬여림 조절이 탁월하다. 기암괴석들이 즐비한 내금강의 매력을 담아낸 실경 사생을 바탕으로 금강산 그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작품은 20세기 말 또 다른 화가 강요배에 의해 새로운 버전으로 탄생했다.

이 그림은 부드러우면서도 칼칼한 색채와 붓질의 맛이 회화적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회화란 이렇게 형상과 서사가 안겨주는 스토리텔링을 넘어서 회화술 자체의 높은 경지가 안겨주는 경이로움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 또한 핵심 가치 중 하나다.

붓 대신 거친 물질에 물감 묻혀 그린 그림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감상하는 포인트 하나 더. 강요배는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일반적인 붓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나무 막대기며 종이 뭉치, 칩뿌리 등으로 그림을 그린다. 가지런하고 매끄러운 붓 대신 이렇게 거친 물질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린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난다. 붓이 아닌 물건들을 들고 거대한 화면을 다스려나가는 화가의 손길과 몸짓과 눈길을 생각해보면 결과로서의 회화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혼돈의 형상과 색채가 뒤섞인 부분을 다듬어 거대한 화면 전체를 만들어나가는 화가의 숨씨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일. 언젠가 가보고 싶은 금강산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달래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행복이 여기에 있다. 🍵

글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국회 시무식, 박병석 국회의장 스리랑카 공식방문 등

- 1월 3일**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시무식에서 “대선을 앞두고 선공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역할 강조
 -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더기 통신 조화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사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대위 내홍에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혀. 김도읍 정책 위원장도 사의 표명
- 1월 5일**

- 여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부실한 경계태세 질타
- 1월 6일**

- 여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경기 평택 냉동 창고 화재와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 1월 11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등 법률안 46건 처리
- 1월 18일**

- 국민의힘, 정부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철회 요구
- 1월 19일**

- 박병석 국회의장, 2박 4일간 스리랑카 공식방문
 - 국민의힘, 기획재정부에 1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
- 1월 20일**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 수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 1월 21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 1월 22일**

- 문재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3국 순방 마치고 귀국
- 1월 24일**

- 더불어민주당,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비해 정부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
- 1월 25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 더불어민주당, 3월 9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종로’,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구’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
- 1월 27일**

-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상정
 - 김부겸 국무총리, 국회에서 14조 원 규모의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2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민화와의 대화

2022. 2. 4. - 2. 15.



작가 : 최인숙 / 추천 : 어기구 의원

장지(壯紙)의 재발견

2022. 2. 16. - 2. 28.



작가 : 이연형 / 추천 : 오기형 의원

-편집후기-

코로나19 덕분에 어느 때보다 건강이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2월 국회보 표지도 이를 반영해 가장 소중한 가치, 건강을 주제로 일상의 행복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껏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 잘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 김현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월, 입춘(立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새해를 정한다고도 하는데, '작심삼일'에 좌절하지 않고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짜봐야겠습니다. 아직 계절은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이미 봄입니다.

- 고영선

'길에서 길을 찾다' 취재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를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눈이 내려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눈을 맞으며 무사히(?) 촬영과 인터뷰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늦었지만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민선

디지털 전문가인 이영 의원과 인터뷰도 하고, 4차 산업을 이끄는 로봇기업 취재도 다녀왔습니다. 로봇이 돌봐주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국회도 '디지털 국회'로 변신중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놀랍기도 하고 상상이 현실이 되어가는 시대가 기대도 됩니다.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